



7 맞춤형 복지



맞춤형 복지

전남복지재단 설립 운영…돈은 도가 대고, 운영은 전문가에 맡겨

전라남도는 인구 분포 상 기초생활 수급자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더욱이 전남도 2014년 사회복지 예산은 무려 1조9,17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3%를 차지한다.

그러나 도민들의 복지욕구는 끊임없이 증가하는데, 복지정책의 전달속도는 그에 미치지 못해 전남 복지 현실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안팎에서 제기됐다. 급기야 도민의 복지수요 욕구를 행정기관에서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복지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박준영 지사는 전남복지재단 설립과 관련, 취임 초기 다음과 같이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무원의 잦은 전보로 전문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도는 정책개발 위주로 하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재단을 설립해 도가 쓰는 예산과 인력, 집행 업무를 위임해 미래복지 수요증가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전남복지재단 설립까지는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전남도는 2012년 1월부터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타 시도의 복지재단 다섯 군데에 대해 운영상의 장·단점을 분석해 2012년 4월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전남복지재단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2012년 7월 23일 ‘전남복지재단 설립 도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2012년 11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전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초안을 만들어 도의회에 부의했다. 그러나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난관에 봉착했다.

기존 사회복지 기관과의 업무 중복성 문제, 타 복지기관의 저항,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의결이 보류됐다. 이에 전남도 실무국장과 과장 등은 의원들을 상대로 간담회와 개별 설명 등을 통해 설득하고, 의원들과 함께 이미 운영 중인 경기, 대전 복지재단의 현지 확인까지 거쳐 재단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

우여곡절 끝에 ‘전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3년 4월 5일 제정되면서 재단 설립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마침내 2013년 4월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7월 4일 학계, 언론계, 종교계, 경제계, 사회복지계 등 각계 각층의 지역대표 37인이 참여하는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이어 이사장으로 도지사를 선임하고, 보건복지부에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11월 4일 재단 설립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전남복지재단이 탄생했다. 또한 마침내 2013년 11월 8일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와 함께 재단운영을 위한 18가지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2014년 3월 6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전남복지재단 개원식을 갖고 ‘복지수도 전남’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박준영 도지사는 개원식에서 “지역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해 모든 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며 “복지 수요자의 자립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남복지재단은 3개 팀 15명의 복지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전라남도에서 출연한 사회복지기금 184억 원을 기본 재산으로, 매년 10억 원의 출연금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전남복지재단은 전남 복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사회복지시설 자립방안 등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개발 등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한편, 전남복지재단은 현재 도청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만, 전남도에서 복권기금 59억 원으로 오는 2015년 초에 완공되는 도청 인근 사회복지회관에 입주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 소식을 접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 각종 복지제도를 몰라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전 행정력을 모아 과거의 축적된 경험과 사례 발굴 기법을 동원해 전남에서는

불행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전남도와 시군에서는 2014년 3월 한 달 동안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특별 조사 및 긴급지원 대상자 집중 발굴 조사 계획을 수립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2014년 3월 기준 복지소외계층 1,760가구를 발굴해 1,286가구에 대해 지원을 결정했다. 예컨대 긴급 복지 187가구(15%), 기초생활보장 286가구(22%), 사회 서비스 지원 28가구(2%), 지자체 지원 216가구(17%), 민간후원 569가구(44%) 지원 등이다.

2006년 처음 실시된 긴급지원 사업은 가장의 사망, 가출, 중병 등으로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하게 생계, 의료비 등을 지원해 가정해체를 막는 사업이다. 따라서 긴급지원은 ‘선지원 후처리 원칙’, ‘단기 지원 원칙’, ‘타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현물지원 우선의 원칙’,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현재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 최저생계비 150%(1인 기준 90만 5,000원, 4인 기준 244만6,000원) 이하이고, 재산기준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다.

긴급 지원 내용은 첫째 생계 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현물 최저 생계비의 66.28% 수준인 4인 가구 월 108만원이고,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다. 둘째, 의료비 지원은 각종 검사와 진료 등 의료 지원, 급여 및 비급여 항목으로 3억 원 이내로 지원하며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2014년엔 대략 5,500가구가 긴급지원 대상이다.

‘나비의 고향’ 합평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간, ‘무지개마을’

2005년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조사하는 ‘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이 소득보장이다. 곧 금전적 지원보다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한우보다 나비로 더 유명한 합평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등장한 ‘무지개 마을’이 있다. 무지개 마을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전국 단위의 최초 신개념 통합형 복지타운으로 설립됐다.

즉,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은 일시적 보조금보다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장애인의 생업용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 사회공헌팀과 연계해 장애인용 근로작업 시설 등 대단위 ‘무지개 마을’ 조성 사업을 전국 최초로 국가사업으로 수립해 추진했다.

전남도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함평군 월산리 일원 24만㎡(7만2,600평) 부지에 835억 원을 투자해 대단위 무지개마을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전남의 무지개 마을 명칭은 당초 ‘장애인 희망타운’이었지만, 집단시설로 인식하기 쉽고, 대외적으로 입주자의 거부반응 우려가 있어 공모를 통해 지은 이름이다. 일곱가지 색깔을 지닌 무지개는 각 색깔마다 역할의 부족함이 없이 평등하고 조화로운 의미이다.

무지개마을은 장애인만을 특정지역에 격리수용하는 집단 생활촌이 아니며, 대기업(사회사형 표준사업장)과 연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고, 쉬고, 즐길 수 있는 기능을 모두 갖춘 맞춤형 선진복지, 자립형 모델이다.

현재 무지개 마을은 1단계로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2개소를 확충하고, 2단계로 IT와 수공업·공예·시설원예 등 장애인 비교 우위 사업장과 전자제품 조립공장 등 생업용 기업체를 유치할 계획이고, 3단계로 복지·체육·교육 시설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무지개마을 건립을 위해 2014년 상반기까지 256억 원을 투입해 부지매입과 기반 조성을 했다. 이곳 함평 무지개마을에 가장 먼저 들어선 사회복지 시설을 ‘노인 요양시설’이다. 사업비 21억 원을 투자해 종사자 24명, 어르신 38명이 거주하고 있다. 간단한 물리치료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재활운동까지 가능한 ‘건강의 요람’이다.

노인요양 시설에 이어 두 번째로 건립된 시설이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다. 사회복지법인 무지개재단에서 사업비 1억7,300만원을 투자해 각종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세 번째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문을 열었다. 이 사업장은 13억 원을 투자해 장애인 종사자 30명을 상시 고용해 종이컵과 복사용지를 재생산한다. 비장애인의 생산품 못지 않은 우수한 제품들이 생산돼 전국에 납품되고 있다.

네 번째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이다. 임대형 민자 사업(BTL)으로 56억 원을 투자해 174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38명이 입원해 치료 중이다. 진료과목으로는 내과, 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과로 구성돼

양·한방 치료가 가능하다. 근무인원은 의사 5명, 간호사 10명, 간호조무사 24명, 요양보호사 19명, 기타 24명으로 총 82명이 근무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13억 원을 투자해 30명이 거주가 가능한 시설이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종사자가 입주해 직장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하는 안정된 생활공간이다. 또한 복권기금으로 68억원을 마련해 201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장애인 한옥 임대주택 19세대를 건축 중에 있다.

앞으로도 무지개 마을에 필요한 사업비 국·도비 563억원을 확보하고, 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친환경공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유치에 최선을 다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무지개마을 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사업이 전국 최초 사업인 만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지원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전 도민이 지혜가 담겨 있다.

공중목욕탕 건립…노인들의 ‘농부증’ 목욕 통해 해결하도록 해

박준영 지사는 취임후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회관 등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들었다. 휴일에도 시간만 나면 사람들을 만났다고 한다. 그때마다 박 지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 “어르신들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인사를 건네면, “어깨가 아프다”, “여기저기가 쑤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문득 “목욕은 얼마나 하시느냐”고 하니, 노인들은 한결같이 “목욕은 뭐…”라고 얼버무렸다고 한다. 사무실로 돌아온 박 지사는 목욕탕이 없는 면을 조사해 보고하도록 했다. 놀랍게도 전체 면지역 65%에 목욕탕이 없었다.

다시 말해 2006년 당시 22개 시·군 중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 198개 면단위 가운데 129개 면에 공중목욕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줄고 소득수준이 낮으며, 이용자가 적어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보니 애초부터 없거나 그나마 있던 곳도 폐업한 상태였다. 놀랍게도 신안군 비금도는 당시 3,900여명이 사는 제법 큰 섬이었지만, 공중목욕탕이 없어 주민들은 간신히 집에서 목욕을 하거나 2시간 이상 거리인 목포에 나갈 때나 목욕을 하고 있었다.

전남지역 노인들은 농어촌 일손부족과 고령화로 대부분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고 있으며, 대부분이 관절염 및 퇴행성 질환 등 소위 '농부증'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농부증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신체를 많이 사용하면서 앓는 증세로 주로 60% 가량이 근골격계질환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그 동안의 치료목적의 보건의료서비스에서 한 발 나아가 사전예방을 위한 노인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고민하던 박준영 지사는 어르신들의 이러한 농부증이 단순하게 고령과 치료지연에 따른 문제라기 보다는 농사일을 마치고 쌓인 피로를 바로 풀어주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역 노인들이 정기적으로 목욕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은 관할 도지사로서 안타깝기 그지 없었다. 박 지사는 목욕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곧 농어촌 공중목욕탕 건립을 시작했다.

전남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에 걸쳐 도 내 공중목욕탕이 없는 129개 면 전체에 목욕탕을 건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건립예산이었다. 목욕탕 1개를 지으려면, 5~6억 원이 들어가고, 129개 면을 다 지으려면 700억 원이 소요된다. 소관부서는 고민에 빠졌다. 공중목욕장 사업은 민선 이후 시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다 운영비 문제 등으로 대부분 중도 포기한 전례가 있었다.

그러나 시·군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업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농어촌 어르신들의 의견을 듣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도 수차례 개최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했다. 대부분의 농어촌 어르신들은 공중목욕장 건립에 환영했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목욕장 건축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이며, 운영비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박준영 지사의 의지는 확고했다. 소관부서 과거 실패 원인을 디딤돌 삼아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며, 2005년 11월 농어촌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포함한 새로운 농어촌 면단위 공중목욕장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먼저 사업추진을 위해 필수시설물과 이용자의 동선(動線)을 고려한 최적화된 표준 설계안을 마련하고, 기존에 건축된 시설의 리모델링을 적극 권장했다. 운영비는 공중목욕장 설계 때부터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남녀가 교대로 이용하는 통합운영을 장려하는 등 건축비와 운영비 절감은 물론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했다.

'남녀 교대 목욕탕'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인 박혜자(朴惠子) 당시 전라남도 복지여성국장이 예산 문제로 고민하는 박 지사에게 "탕을 남녀로 구분하지 말고 하나만 만들어 날짜별로 남녀가

이용토록 하면 건축예산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자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희망 시·군에 개소 당 신축 2억 원, 개보수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도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2005년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지원 받았다.

또 건강을 위한 목욕장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강사를 초빙해 요가, 생활체조, 노래교실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노인건강 증진프로그램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과 건강관리프로그램을 병행 실시한 결과,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그동안 크고 작은 통증으로 힘들어 하시던 어르신들의 만성 퇴행성 질환이 병원치료 없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2007년 1월부터 농어촌건강증진프로그램을 공중목욕장이 설치된 시군 전역으로 확대 시행했고, 목욕과 운동 및 건강검진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해 공중목욕장 이용객 수는 대폭 증가했다.

아울러 과거 공중목욕장 사업이 과도한 운영비 부담으로 인해 부실운영으로 이어졌던 만큼, 공중목욕장 운영비 확보방안도 마련했다. 이용객 1인당 1,000~2,000원(기초수급자 및 장애인은 무료) 정도의 부담 없는 요금을 징수해 운영비의 일부를 충당했으며, 도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개 소당 도비 1,000만원을 지원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 건립과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되자 처음에는 미온적으로 대응하던 시군의 신청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공중목욕장 사업은 2006년 시작해 2013년까지 당초 127개면에 12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시군에서 추가설치 요구가 많아 결과적으로 140개 면에 130개소의 공중목욕장 건립과 개보수를 지원하게 됐다. 2013년 12월에는 해남군 북평면에 100호 공중 목욕장을 개장했다.

이러한 사업성과를 인정해 2012년 12월에는 《한겨레신문》이 주관하는 지역복지 우수시책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각 언론사마다 공중목욕장 사업의 효과를 기사화했다. 그 결과 전국 각 시도 및 시·군 공무원들의 견학이 줄을 이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공중목욕장 사업을 농어촌 주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사업이라고 판단, 해남 북평면 100호 공중목욕탕 개장식에 장관 명의로 축하화환을 보내왔을 정도다.

드디어 2014년부터 ‘작은 목욕탕’ 사업으로 시범 운영하는 등 정부와 전국

자치단체로 확대돼 나가고 있다. 특히 전국 시도 2007년 지방재정운용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과 함께 상금으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받았다. 박 지사는 상금 전액을 2008년 먼단위 공중목욕장 건립비로 사용하도록 지시했고, 박 지사는 이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훈훈해진다고 했다.

‘닥터 헬기’ 운영...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생명 지킴이’

2010년 어느 늦은 여름날 오후, 119상황실에 긴급하게 벨소리가 울려댔다. 신안군 어느 마을에서 걸려온 환자이송 요청 전화였다. 주민 김모(60)씨가 농기계 작업도중 팔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로 과다출혈과 쇼크 상태가 지속돼 생명이 위독하다는 것이었다.

119상황실에서는 긴급히 소방항공대에 헬기를 요청해 환자를 이송토록 했다. 소방항공대 헬기가 최소한의 응급처치 장비와 약품을 탑재하고 응급구조사가 탑승해 이륙하기까지 30분, 환자가 있는 섬마을 헬기장에 착륙해 환자를 신고 병원으로 옮기기까지 1시간이 훌쩍 넘는 시간이 걸렸다. 또한 소방헬기로 환자를 이송하는 동안 환자의 상태는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었으나, 최소한의 응급처치 장비밖에 없는 상황이라 모두들 기도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다행스럽게 이송된 환자는 병원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으나, 후유증으로 인해 긴 시간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은 섬에 사는 주민들이라면 한 번쯤 주변에서 겪었던 상황으로, 이를 숙명이라 여기며 살아왔다. 2011년 9월 23일 전남 도 하늘에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취항하면서 섬 주민들이 아픔은 어느덧 과거 속 기억이 됐다.

전남도는 2011년 초 보건복지부가 응급환자 이송 취약지 중 도서지역을 포함한 6개 시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 ‘응급 의료 전용헬기(가칭 닥터헬기)’ 운영사업에 참여했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219개의 섬과 296개의 유인 도서를 보유하고 있고, 이중 134개 섬에서 응급헬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계속적으로 요청했다. 그 결과, 전라남도 목포한국병원과 인천광역시 가천의대 길병원이 ‘닥터 헬기’ 운영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2011년 9월 26일 오전 11시 23분 목포한국병원 운항관제실에 갑자기 벨

소리가 울렸다. 신안군 비금도 신안대우병원에서 걸려온 환자이송 요청 전화였다. 주민 강모씨(87세, 여)가 혈색소 수치와 혈압이 낮아 위장관 출혈이 의심되어 병원 이송이 필요했다. 이송 요청전화는 목포한국병원 문원식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김동성 응급구조사, 운항관리사가 동시에 연결돼 일제히 출동준비에 들어갔다. 김진환 운항관리사는 비금도 기상상황을 확인 후, 기장에게 통보했으며, 출동 요청자에게는 가장 가까운 인계점을 안내했다.

의료진은 의료장비를 갖추고 병원 옥상헬기장으로 신속히 이동했으며, 응급 의료 헬기는 F1경주장 대기현장으로 이륙해 병원 옥상 헬기장에서 의료진을 탑승해 현장으로 출동했다. 신고 접수 8분만에 헬기가 날았고, 20분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앰블런스로 헬기장에 옮겨져 있던 강씨에게 의료진은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초음파로 복부 상태를 점검했다. 심근(心筋)에 장애가 있는지, 복부 장기(臟器)에 출혈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아울러 혈압, 심전도, 혈액산소량, 폐의 환기 상태를 체크했다. 자동 약물 주입기로 링거액을 주입했다. 불과 3~4분만에 응급 처치가 일사분란하게 진행됐다.

이어 환자의 상태를 병원에 알리고 대응 준비를 지시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에 대기하던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 등이 강씨에게 필요한 검사와 처치를 실시했다. 전화 접수에서 병원에 도착까지 걸린 시간은 50분. 평소대로 앰블런스와 선박을 이용했다면 3시간이 더 걸렸을 것이다.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시간이다.

응급의료헬기의 첫 비행은 성공적이었다. 치료시기를 앞당겨 후유장애 가능성을 줄였다. 의료장비가 없는 소방헬기였다면, 응급의학 전문의가 탑승해도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응급헬기 내 각종 첨단의료장비를 활용해 전문의가 검사, 투약을 결정했고, 치료는 신속히 진행됐다.

목포한국병원 항공의료팀은 오상우 응급의학과장을 팀장으로 응급의학 전문의 5명, 간호·응급구조사 6명, 기장 5명, 운항관리사, 정비사 등 24명으로 구성된다. 당직 의사는 방화(防火)·방전(防電) 기능이 있는 항공복을 항상 입고 있다가 곧바로 출동한다.

응급의료 헬기는 항공 이송 중 응급환자 치료를 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 심장 제세동기, 이동형 초음파기, 환자감시 모니터 등 각종 응급장비와 응급의약품을 탑재하고 있으며, 현장처치 능력을 갖춘 응급의학전문과의 구조사, 간호사가 탑승해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해 응급환자를 사고현장에서부터 전문적인 응급치료를 하면서 의료기관까지 신속히 이송하는 '하늘을 나는 응급실'인 것이다.

아울러 2014년부터 정부는 응급 이송이 가능한 각 부처 헬기 83대를 단일 운영체계를 도입해 공동 활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전남도는 응급헬기 1대, 소방헬기 2대, 해경헬기 5대, 산림청 헬기 4대 등 총 12대를 공동 활용해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할 계획이다. 또한 섬 지역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주간이나 야간에도 쉽고 빠르게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응급 의료 헬기 착륙장을 지속적으로 건설해 나갈 예정이다.

은퇴의사 초청 ‘행복의원’ 개원…유인도 486개 중 의료시설 있는 섬 99개

전남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의료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특히 섬 가운데 유인도는 전국 486개소 중 전남에 296개소(61%)가 있다. 그 가운데 보건 의료시설이 있는 지역은 99개 도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전남도는 농어촌 의료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은퇴의사를 초빙해 ‘행복의원’을 운영하는 것이 절실했다.

박준영 지사는 2009년 6월 22일 실력 있는 은퇴 의사를 지역에 봉사해 달라는 의미에서 ‘행복의원’을 구상했다. 은퇴 의사를 보건지소에 배치하거나 외딴 지역에 살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모집해 활용하는 방안을 알아보라고 주문했다.

은퇴한 의사를 보건지소와 도서의 벽지(僻地)에 배치해 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은퇴 의사 중 일반의사는 도서, 오벽지에 배치하고, 치과의사나 한의사는 보건지소에 배치한다는 기본방침도 수립했다. 또 진료장소, 거주시설 및 의료장비·의약품 등은 시군과 협의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비와 식비 등 최소한의 실비 보상계획을 세워 은퇴의사 등 전문가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한 인터넷접수창구(남도친구들) 설치 및 모집공고를 했다.

대한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및 시·군 등에 자원봉사 은퇴의사 추천을 협조 요청하는 한편, 신문과 방송을 통해 은퇴의사 모집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수도권 등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방문을 통해 협조도 구했다. 마침내 전남도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1969년도에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뉴저지 파사익병원, 버지니아주 마리뷰 병원, 텍사스주에서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로 근무한 정우남(당시 68세)씨를 은퇴의사로

맞이했다.

전라남도는 우선적으로 도서지역에 ‘행복의원’을 개설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여수시·영광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등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완도군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해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2009년 7월 은퇴의사 활용계획을 세우고, 2011년 5월 은퇴의사 1차 면담 및 진도군 현지방문, 2011년 7월 은퇴의사 2차 면담 및 완도군 신지면, 노화면, 보길면을 방문한 후 완도군과 세부 추진계획을 협의했다.

완도군 노화 청년회에서는 소아청소년과 배치를 희망했다. 노화읍·보길면·소안면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세대수는 3,145세대에 인구는 5,088명이었고, 이들 3개 지역의 14세 미만 어린이는 2,000여명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반드시 필요했다. 특히 노화읍과 보길면은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를 지은 고산 윤선도(尹善道)의 유적지가 있으며, 해수욕장 등 관광지로서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었다.

완도군과 협의한 결과 은퇴의사의 숙소는 보길면 소재 펜션을 우선적으로 임대하고, 도비와 군비를 투입해 신축하게 했다. 전남도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주거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전라남도의 끈질긴 은퇴의사 숙소 건립비 지원요청에 보건복지부는 2012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침 일부를 개정, 2014년도 사업에 지원을 확정했다.

한편, 전남도는 ‘행복의원’에 또 한 분의 은퇴의사를 모셔올 수 있었다. 1970년도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74년 미국으로 건너가 뉴저지종합병원과 휴스턴에서 내과 전문의로 38년 동안 진료를 하다 2011년 12월 은퇴한 박준일(당시 69세)씨를 맞이했다.

박준일 전문의는 지난해 8월 신안군 장산, 하의, 신의면을 시찰한 후 신의면 근무를 희망했고, 진료실을 전면 개보수해 2014년 4월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계획은 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한 시책을 전남도에서 최초로 추진해 두 번째 행복의원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사회봉사 의지가 있는 은퇴의사를 꾸준히 초빙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숙원사업인 인구감소를 막는 방법으로 셋째아기 갖기 등 아기의 울음소리가 동네 곳곳에서 들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제도는 임신을 하게 되더라도 산전 진찰 등을 받아야 하는 병원이 없어 많은 시간을 투자해 인근도시로 원정 진찰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특히 결혼이주자가 임신을 했을 때 언어문제로 배우자와 함께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인근 도시로 나가야 하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2008년 8월 박준영 지사는 전남에서 만물은 아이를 마음 놓고 낳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시행을 결심했다. 전남도는 보건복지부에 사업을 공모하였으나, 의료법에서 금하고 있는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하고, 특히 의료계에서는 이 사업을 전시행정의 일부로 임신부나 개원의 모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시말해 의료업이 아닌 관계로 진찰은 가능하나 치료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난색을 표명했다.

박준영 지사는 의료계와의 갈등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산부인과 의사 단체 등을 방문해 “이 사업은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익사업이며, 산부인과 미개설 농어촌지역만을 대상으로 추진한다”며 “분만 시는 검진 기록부를 분만 의료기관으로 인계 조치하겠다”고 설득해 갈등을 해소했다.

2008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 공모 후 국고보조금 확정, 총 사업비 4억6,000만 원으로 검진차량, 골밀도측정기, 초음파, 심전도기, 체지방 분석기 등 장비구입비(국비 50%)를 지원받았다. 추진기관으로 공공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목포시의료원과 업무 협약 후 2009년 4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전담 공중보건의사(산부인과 전문의)를 파견했다.

2009년 7월 보건복지부장관, 박준영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도청 민남의 광장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발대식’을 가졌다. 그해 7월부터 보성군, 영암군, 함평군, 진도군, 신안군 등 5개 지역 임신부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월 2회 산전진찰 및 초음파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등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검진을 실시해 오고 있다.

여성취업·창업 박람회...1,042명이 취업에 성공

우리나라 여성은 출산이나 육아, 가사노동 등으로 경력이 단절돼 자신의 커리어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반면, 전남의 영세한 기업은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기업홍보와 취업자부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남도는 도내 500여개 기업과 구직여성 1,830여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전남 여성사이트에 구인구직 데이터를 구축했다. 이어 2007년 여성만을 위한 취업 창업 박람회를 ‘취업! 내 인생의 반올림# 그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처음으로 개최했다. 2007년 목포에서 개최한 첫 박람회에는 도내 824개 기업과 5,900여명의 여성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했고, 1,042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첫 여성 취업박람회 후, 전남도는 2008년부터 ‘전남여성 취업 창업 박람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매년 1회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소재하고 있는 3개 시(목포, 여수, 순천)를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박람회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대학졸업 예정자들에게 취업 컨설팅과 틈새시장을 겨냥한 창업아이디어도 함께 제공해 여성이 지닌 특성과 장점을 최대화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대부분이 전업주부로 오랜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왔기 때문에 박람회 참여를 낮설어 했다. 따라서 전남도는 일자리만 제공하는 박람회가 아닌, 여성을 위한 하나의 문화축제의 장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력서 작성요령을 물론, 면접 메이크업과 이력서 사진촬영을 통해 잠재돼 있는 취업의 욕구를 자극하면서도, 유모차를 끌고 와도 편안하게 취업·창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놀이방 등 여성을 배려하는 박람회장 운영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남성에 비해 활동의 제약이 많은 여성이 구직을 위해 먼 거리의 박람회장 찾아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몇 시간씩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구직자들로,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인원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취·창업 인원수도 줄어들어 2010년에는 박람회 존재가 불명확해졌다.

특히 그동안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는 목포, 여수, 순천 중 한 곳을 선정해 연 1회 개최해 왔던 박람회는 2011년 개최 후 변화가 절실했다. 여성의 접근성을 높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했다.

이에 박준영 지사는 여성취업 박람회를 권역별로 나눠 개최할 것을 지시했다. 그 결과 전남여성취업창업박람회는 2012년부터 3개 시와 함께 군 단위 최초로 장성군을 포함해 4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2년 11월 7일 장성군 홍길동체육관에서 군 단위 최초로 취업창업박람회를 개최해 전남 북구 권역의 182개 구인업체와 1,000여명의 여성구직자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대성황을 이뤘다.

2007년 개최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도내 여성채용 수요가 있는 업체들을 발굴하고, 구직여성 5,000여명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까지 전남여성

취업창업박람회는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의 취업창업박람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성취업창업박람회는 단순히 일자지만 연계하는 박람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육아와 가사에 지친 여성들이 서로를 공감하는 문화의 장이자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청년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생 벤처 동아리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박준영 지사는 “평소 창업의 인큐베이터인 이스라엘군의 ‘탈피오트 시스템(Talpiot System)’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벤처 빌딩을 각 군마다 만들어 대학생들이 재학기간 중 숙식을 하며 연구 활동과 모의투자 게임 등으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전라남도 영유아 5만 3,000여명 보육료 지원받아

무상보육은 중요한 선결과제다. 전통적인 가족구조에서는 가족 내 자녀 양육이 가능했으나 지속적인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핵가족화로 양육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게 됐다.

또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사회적 성취욕구 증대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점차 확대됐으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양육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다. 영유아 무상보육은 저출산을 극복하고, 여성인력을 활용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이나 정부는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하는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무상보육은 시행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2013년부터 만 0~5세 영유아의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했다. 2012년 만 0~2세와 5세의 무상보육을 시작해 2013년에는 만 0~5세 전 아동으로 무상보육을 확대한 것이다. 전남의 경우, 2012년 3만4,000여명의 영유아가 지원을 받았으며, 2013년에는 5만3,000여명이 보육료 지원을 받았다. 2013년부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 2만5,000여 명의 아동이 지원을 받았다.

전남도는 2012년부터 보육료 예산의 급속한 증가로 지방재정 악화와 무상보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무상보육료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2012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던 박준영 지사는 전국 시도지사와 함께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등

무상보육재원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결국 2012년 이후 지속적인 무상보육 국비 상향지원 요구로 2014년에는 보육료 예산의 국비 지원 분담이 15% 증가해 다소 지방재정의 숨통을 트게 해주었다. 박준영 지사는 많은 예산과 노력이 들어간 영유아 무상보육이 부모와 아동 모두가 만족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무상보육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자체적으로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다.

예컨데 2012년 만 0~2세아 무상보육이 시작된 이후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민주당에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고, 중앙정부를 방문할 때마다 무상보육의 지원체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영유아 무상보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무상보육 지원체계 개선 건의 등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여성인력의 경제참여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7 맞춤형 복지

1. 전남복지재단 설립 · 운영

전남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 장애인 등 복지수요자인 사회적 취약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전남도의 2012년 사회복지 예산은 1조 5,265억원으로 전남도 전체예산의 28.3%에 달했고, 2014년에도 1조 9,17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3%에 이른다. 그럼에도 도민들의 복지욕구는 끊임없이 증가하는데 복지정책의 전달속도는 그에 미치지 못해 전남 복지현실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안팎에서 제기되었다.

사회복지 수요 현황

(단위 : 명, '13.12. 31현재)

구분	전체인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등록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족
전국	51,141,463	1,350,891 (2.6%)	1,458,871 (2.9%)	2,511,159 (4.9%)	6,250,686 (12.2%)	15,486 (0.03%)	508,927 (1.0%)
전남	1,907,172	80,315 (4.2%)	88,508 (4.6%)	145,788 (7.6%)	374,565 (19.6%)	1,592 (0.08%)	20,277 (1.1%)

급기야 도민의 복지수요 욕구를 행정기관에서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복지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특히, 이를 전담하여 추진해야 할 독립된 복지전문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공무원은 잦은 전보로 전문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는 정책개발을 위주로 하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재단을 설립하여 도가 쓰는 예산과 인력 집행업무를 위임하여 미래복지 수요 증기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전남복지재단이 설립되기까지는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전남도는 2012년 1월부터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서 타 시도에 이미 설립 운영 중인 복지재단(5개소)에 대한 운영상의 장단점 분석과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해 2012년 4월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어 설립 계획 중인 (가칭)전남복지재단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바람직한 설립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2012년 7월 23일 전라남도의회 2층 초의실에서 사회복지계, 학계, 도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전남복지재단 설립 도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에서는 변화하는 복지환경과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전남형 복지모델 정립과 정책개발, 사회복지서비스 관리체계의 구축,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전남복지의 역량강화 등을 위한 민·관 합동의 전남복지 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남복지재단의 바람직한 설립방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전남도의 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복지재단 설립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고, 재단 설립이 복지전달체계에서 어떤 위상과 방향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방안에 대해 많은 의견이 오갔다.

이어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전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초안을 만들어 2012년 11월 도의회에 부의하였다. 그러나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하였다. 이유인즉 기존 사회복지 기관과의 업무 중복성 문제, 타 복지기관의 저항,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등을 이유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에 밀려 안건 의결이 보류되었다. 이에 전남도 실무 국장과 과장 등은 의원들을 상대로 간담회와 개별 설명 등을 통해 설득을 하고, 의원들과 함께 기존에 설립하여 운영중인 경기, 대전 복지재단의 현지 확인까지 거쳐 재단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전남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3년 4월 5일 제정되면서 재단 설립에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

마침내 2013년 4월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7월 4일 학계·언론계·종교계·경제계·사회복지계 등 각계 각층의 지역대표 37인이 참여하는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였다.

발기인 총회에서는 설립 취지문 채택, 정관 제정, 출연재산의 결정,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이사와 감사 선임과 더불어 이사장으로 도지사를 선임하였다. 이렇게 재단설립의 구비요건을 갖추고 2013년 7월 보건복지부에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10월 31일자로 설립 허가를 받게 되어, 11월 4일자 설립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명실공히 전남 복지재단이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또 2013년 11월 8일 제1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와 함께 재단 운영을 위한 18가지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2013년 1월 공모를 통하여 재단을 이끌어 나갈 대표이사를 임명하였

으며, 더불어 재단에서 근무할 직원 11명을 공개 채용하였다.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 동안 해남 땅끝에서 전남복지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도지사와 복지관련 공무원, 재단 직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전라남도 복지의 우선순위와 재단에서 해야 할 업무 그리고 복지관련 당면 과제 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드디어 2014년 3월 6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전남복지재단 개원식을 갖고 ‘복지수도 전남’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개원식에서는 “지역에 맞는 복지 정책을 수립, 모든 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하고, 복지 수요자의 자립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

현재 전남복지재단 조직은 4개 팀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남도에서 출연한 사회복지기금 184억원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매년 10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앞으로 전남복지재단은 전남 복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사회복지시설 자립 방안 등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개발 등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한편 전남복지재단은 현재 도청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만 복권기금 59억원으로 오는 2015년 완공 되는 도청 인근 사회복지회관에 입주할 예정이다.



발기인(창립) 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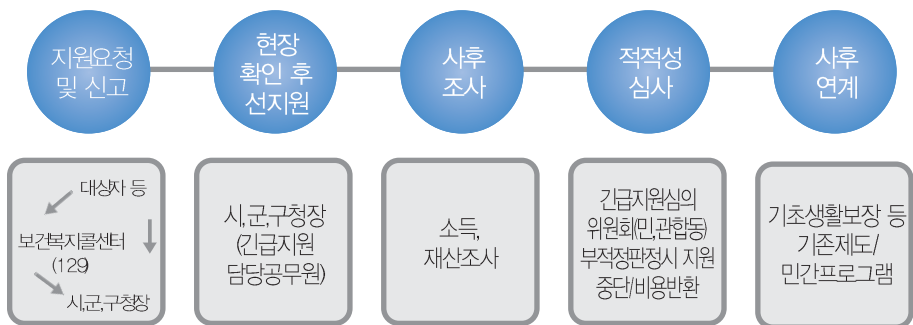
복지재단 현판식

2. 위기가정 긴급지원

2006년 처음 실시된 긴급지원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하게 생계·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가정해체 예방 및 보호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긴급지원은 선지원 후처리 원칙, 단기지원 원칙, 타 법률지원 우선의 원칙, 현물지원 우선의 원칙,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현재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1인기준 905천원, 4인기준 2,446천원) 이하(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이하(4인기준 1,956천원)이고, 재산기준은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이다.

긴급지원 대상자 지원체계와 절차



첫째, 생계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으로 최저생계비의 66.28% 수준인 4인 가구 월 1,080천원이고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둘째, 의료비 지원은 각종 검사 및 진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급여 및 비급여 항목으로 300백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셋째, 주거지원은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농어촌 지역 3~4인 기준 월 224,800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넷째,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은 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또는 시설 운영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4인 기준 월 1,339천원,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섯째, 교육비 지원은 초·중·고생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및 학용품 등 필요한 비용을 2회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 밖의 지원에는 해산비 60만원, 장제비 75만원, 체납전기료 50만원, 연료비 월 88천원 지원 가능하며, 연료비는 6개월까지 지원 등이다.

전남도는 2005년 12월 23일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된 후 2008년 5월에 긴급지원 제도의 만족도·인지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남도는 긴급지원 대상자 중 무작위 추출하여 5,000여명이 설문에 응답한 결과 96.7%가 제도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 분	소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망)
긴급지원 신청가구	31,067	1,729	2,241	2,479	5,932	4,035	3,276	2,636	4,739	4,000
긴급지원 결정가구	31,565	1,498	2,178	2,412	5,204	3,991	2,960	2,358	5,464	5,500
지원액(백 만원)	34,523	1,857	3,274	3,582	6,214	4,598	4,007	2,660	4,287	4,044
지원 후타지원 연계	16,442	67	63	104	118	1,107	1,645	2,473	4,865	6,000

예컨대, 2009년 1월 한달 동안 긴급 의료비 지원신청은 총 286건 중 178건(62%)에 이르렀으나 휴·폐업 및 실직으로 긴급복지 지원신청자가 12건(4%)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받은 박준영 지사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자살, 가정해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특별 지시했다.



이에 전남도는 보건복지부에 긴급복지 지원 기준 중 금융재산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토록 건의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건의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2009년 2월부터 금융재산 기준을 300만원으로 완화시켰다.



금융재산 기준이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되면서 2008년 2월 한달동안 동일기간 대비 지원대상자가 57% 증가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2006년부터 시작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2013년 6월 28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금융재산기준은 완화하여 고시함으로써 큰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2013년 6월 28일 일부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서는 생계지원 소득을 최저생계비 기준 120%에서 150%로 상향조정하고, 금융재산 기준을 종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시켰다. 이로 인해 전남도에서는 2012년 대비 긴급지원 신청자수가 2,636건에서 4,739건으로 180% 긴급지원 결정 건수는 2,358건에서 5,464건으로 232%까지 증가했으며 지원액은 2,660백만원에서 4,287백만원으로 1,627백만원(161%) 이나 증가했다. 또한 지원 후 타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연계도 2,473건에서 4,864건으로 2배나 증가하여 긴급복지사업은 찾아가는 서비스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한편,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세모녀 자살 사건 이후 계속 되는 자살 사건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각종 복지 제도를 몰라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행정력을 모아 과거의 축적된 경험과 사례발굴 기법을 동원하여 위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전남도와 시·군에서는 2014년 3월 한 달 동안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특별 조사 및 긴급지원 대상자 집중발굴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2014년 3월 기준 복지소외계층 1,760가구를 발굴하여 1,286가구에 대해 지원을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긴급복지 187가구(15%), 기초생활보장 286가구(22%),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28가구(2%), 지자체지원 216가구(17%), 민간후원 569가구(44%)를 지원하였다.

한편 전남도는 긴급복지지원사업과 관련해 현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최저생계비의 범위와 금융재산의 구체적인 범위의 기준'에 대하여 2014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에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3. 무지개마을 조성

한우보다 나비로 더 유명한 함평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등장한 무지개마을. 이곳 무지개 마을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전국최초 신개념 통합형 복지타운으로 설립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실태조사결과(2005년)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이다. 곧 금전적 지원보다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자립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다.

전남도는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은 일시적 보조금보다는 일자리를 마련하여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장애인의 생업용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 사회공헌팀과 연계하여 장애인용 근로작업시설 등 대단위 “무지개마을” 조성 사업을 전국 최초 국가사업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전남도에서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함평군 월산리 일원 240천㎡ 부지에 835억원을 투자해 대단위 “무지개마을”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전남의 “무지개마을” 명칭은 당초 “장애인 희망타운”이었지만, 소극적인 이미지와 집단시설로 인식하기 쉽고 대외적으로 입주자의 거부반응 우려가 제기되어 공모를 통해 변경한 것이다. 일곱 가지 색깔을 지닌 무지개는 각 색깔마다 역할의 부족함이 없이 평등하고 조화를 지향한다.

“무지개마을”은 장애인만을 특정지역에 격리수용하는 집단 생활촌이 아니며, 대기업(사회사형 표준사업장)과 연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고,

쉬고, 즐길 수 있는 기능을 모두 갖춘 맞춤형 선진복지, 자립형 모델로 만들어 가고 있다.

현재 “무지개마을은” 1단계로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2개소를 확충하였고, 2단계로 IT와 수공업, 공예, 시설원예 등 장애인 비교우위 사업장과 전자제품 조립공장 등 생업용 기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며, 3단계로 복지, 체육, 교육시설을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2014년 상반기까지 256억원을 투입하여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을 한 이곳 함평 무지개마을에 가장 먼저 들어선 사회복지시설은 바로 “노인요양원시설”이다. 사업비 21억원을 투자하여 종사자 24명, 어르신 38명이 거주하고 있다. 간단한 물리치료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재활운동까지 가능한 건강의 요람이다.

노인요양시설에 이어 두 번째로 건립된 곳이 “장애인주간보호센터”다. 사회복지법인 무지개재단에서 사업비 1억 73백만원을 투자하여 장애인 13명이 입소해 있으며, 각종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다. 세 번째로



노인전문요양원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문을 열었다. 이 사업장은 13억원을 투자하여 장애인 종사자 30명을 상시 고용하여 종이컵과 복사용지를 재생산하는 작업장으로, 비장애인의 생산품 못지않은 우수한 제품들이 생산되어 전국에 납품되고 있다.

네 번째,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임대형 민자 BTL사업으로 56억을 투자하여

174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38명이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다. 진료과목으로는 내과, 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과로 구성되어 양·한방 치료가 가능하다. 근무 인원은 의사 5명, 간호사 10명, 간호조무사 24, 요양보호사 19, 기타 24명으로 총 82명이 근무하고 있다.

다섯 번째 “장애인거주시설”은 13억을 투자하여 30명 거주가 가능한 시설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가 입주하여 직장과 주거가 동시에 가능한



함평 공립 요양병원

안정된 생활공간이 된다. 또한 장애인 한옥임대주택을 복권기금 68억을 들여 19세대를 건축 중에 있으며 201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무지개마을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국·도비 563억원을 확보하고, 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친환경공장·장애인직업재활 시설 등 유치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무지개 마을 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사업이 전국 최초 사업인 만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지원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데 전 도민이 지혜를 모을 예정이다.

4. 전라남도 노인회관 건립

2005년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이전된 이후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는 별도의 사무실 없이 광주광역시 노인복지회관 건물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즉, 도청 남악 이전과 함께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도 도내로 이전해야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별도의 노인회관을 건축하지 못하였고, 이는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으로 대두되었다((사)대한노인회 정관 제3조에 각급회 사무소는 해당지역 행정기관의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

이는 도청 이전으로 여러 유관기관들의 이전과정에서 발생한 우선 순위 때문이다. 즉, 먼저 미래에 전남도를 이끌어 갈 어린이와 젊은 세대를 위한 도립도서관을 우선적으로 준공하고, 다음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회관을 준공한 이후에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우리 세대 삶의 방향을 바르게 이끄는 기틀이 되어주신 어르신들을 위한 도 노인회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 도립 도서관과 보훈회관 예산이 확보된 후 도 노인회의 도내 이전과 독자적인 사무실 확보를 위해 2011년 4월 전남 노인회관을 목포시 옥암동 일원에 건립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국비 지원을 받아 노인회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보건복지부에 기능보강사업명목으로 지원이 가능한 지에 대해 의견을 타진하였으나 “노인회관 건립사업은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이 아닌 업무용 시설에 해당되므로 지원이 곤란하다”라는 답변이 회신되었다.

결국 노인회관 건립사업에 국비 확보가 필요한 만큼 전남도는 방향을 선회하여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였다. 2011년에 수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을 방문하여 설득작업에 착수했다.

여건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비로 부지를 우선 확보하고 설계를 선행한 이후 검토하겠다”는 최종 의견을 전달해 왔다.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검토 의견에 전남도는 지체 없이 전남개발공사에 의뢰하여 무안군

남약 일원에 2011년 5월 노인회관 건립 부지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어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부지와 설계를 위한 예산 확보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우선 노인회관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한 도 예산 2억 9천만원을 2011년 추경에 확보하고, 2011년 12월 28일 건립 부지를 매입하여 전라남도도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여 행정안전부의 부지 확보 조건을 일차적으로 충족하였다. 다음으로 설계를 위해 2012년 제1회 추경에 도비 1억 2천만원의 설계용역 예산을 반영하였고, 2012년 9월에 도 노인회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선행 과정을 최종 마무리 하였다.

박준영 지사부터 담당직원까지 국비 확보를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2012년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1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2012년 12월 추경에 행정안전부가 교부한 15억원의 특별교부세와 더불어 자체 마련한 도비 10억원 등 총 사업비 25억원을 반영하게 되었다.

예산이 확보되자, 전남 노인들의 전당이 될 노인회관 건립을 위해 경기도와 강원도의 노인회관을 견학하고 어르신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 또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년 2월 노인회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신축공사 발주를 위한 회계과의 계약심사와 감사담당관의 일상감사를 완료하여 설계서를 최종 마무리 하였다.

2013년 5월 노인회관 신축 공사 계약을 회계과에 의뢰하여 계약 자카결정되자 2013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8개월에 걸쳐 노인회관 신축공사가 진행되어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가 광주 시대를 마감 하고 새롭게 전남 남약 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노인회 등 입주 기관단체의 이전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14년 3월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를 비롯 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전라남도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이전·입주 하였으며, 드디어 박준영 도지사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기관장 및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14년 3월 13일에 성대한 개관식을 개최 하였다.



전라남도 노인회관(전남 무안군 남약리)

비록 웅장하고 많은 기관과 단체 가 입주한 북적이는 건물은 아니지만, 전국 최초로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전남도의 현실에서 노인회관을

전라남도 노인회관 현황

-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968번지
- 규 모 : 건축 1699.28㎡, 부지 902.80㎡(지상 4층)
- 사 업 비 : 30억원(특별교부세 15, 도비 15)
- 주요시설 : 사무실, 회의실, 숙직실, 창고 등
- 개 관 일 : 2014. 3. 13.
- 입주현황
 - 경로당광역지원센터(1층) -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2층)
 - 공동 회의실(3층) - 전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4층)
- ※ 도 행정재산으로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에서 위탁관리(5년)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는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로 발돋움 하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



전라남도 노인회관 개관식

5. 공중목욕장 건립

전남지역 노인들은 농어촌 일손 부족과 고령화로 대부분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고 있으며, 대부분이 관절염 및 퇴행성 질환 등 소위 농부증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치료 목적의 보건의료서비스에서 나아가 사전 예방을 위한 노인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고민하던 전남도는 어르신들의 이러한 농부증이 단순하게 고령과 치료 지연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농사일을 마치고 나서 쌓인 피로를 바로 풀어 주지 않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



한두현 회장에게 감사패를 받는 박준영 도지사

목욕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우선, 전라남도 농어촌 지역의 목욕장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도내 공중목욕장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농어촌 지역에 공중목욕장이 없는 면이 70%에 이르러 농어촌 면단위에 공중목욕장 건립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소관부서에서는 고민에 빠졌다. 공중목욕장 건설은 민선 이후 시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다 운영비 문제 등으로 대부분 중도 포기한 전례가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군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업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농어촌 어르신들의 의견을 듣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도 수차례 개최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였다.

대부분의 농어촌 어르신들은 공중목욕장 건립에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목욕장 건축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이며, 운영비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 공중목욕장 사업 역시 과도한 운영비 부담에 따른 부실 운영으로 이용객이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져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소관부서에서는 과거 실패 원인을 디딤돌 삼아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며 2005년 11월 농어촌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포함한 새로운 농어촌 면단위 공중목욕장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먼저 사업추진을 위해 필수 시설물과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한 최적화된 표준설계안을 마련하고 기존에 건축된 시설의 리모델링을 적극 권장하였으며, 운영비는 공중목욕장 설계 시부터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남·여가 교대로 이용하게 하는 통합운영을 장려하는 등 문제가 되었던 건축비와 운영비 절감은 물론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자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희망 시군에 개소당 신축 2억원, 개보수 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중앙정부 및 지역 국회의원에게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05년 11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0억원을 받아 시군에 지원하게 되었다.

건강을 위한 목욕장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요가, 생활체조, 노래교실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실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 보험공단과 연계하여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 하였다.

또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과 건강관리프로그램을 병행 실시한 결과,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그 동안 크고 작은 통증으로 힘들어 하시던 어르신들의 만성 퇴행성 질환이 병원 치료 없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2007년 1월부터 농어촌 건강 증진프로그램을 공중목욕장이 설치된 시군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였고, 목욕과 운동 및 건강검진을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하게 되어 공중목욕장 이용객 수는 대폭 증가하였다.

이울러 과거 공중목욕장 사업이 과도한 운영비 부담으로 인해 부실 운영으로 이어졌던 만큼, 공중목욕장 운영비 확보방안도 마련하였다. 이용객 1인당 1~2천 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은 무료) 정도의 부담 없는 요금을 징수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충당하였으며, 도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개소당 도비 1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이렇게 농어촌 공중목욕장 건립과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이 활성화되자, 처음에는 미온적으로 대응하던 시군의 신청이 쇄도하였다.

공중목욕장 사업은 2006년에 시작하여 2013년까지 추진하였다.

당초에는 127개면에 12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시군에서 추가 설치에 대한 요구가 많아 확대한 결과 140개면에 130개소의 공중목욕장 건립 및 개보수를 지원하고 2013년 12월에는 해남군 북평면에 100호 공중목욕장을 개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업성적을 인정하여 2012년 12월 한겨레신문이 주관하는 지역복지 우수시책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각 언론사 마다 공중 목욕장 사업의 효과를 기사화 하였고, 전국 각 시도 및 시군 공무원의 견학이 줄을 이었다.



공중목욕장 탈의실 내부



공중목욕장 탕 내부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장면

지원년도	2006 ~ 2013년 까지도원 내역						총 지원액 (백만원)
	면 개수			건립 개소			
	계	신축	개보수	계	신축	개보수	
계	140	119	21	130	109	21	31,370
2006	33	27	6	29	23	6	5,680
2007	18	15	3	18	15	3	3,200
2008	22	19	3	21	18	3	4,700
2009	10	10	-	10	10	-	3,390
2010	7	7	-	7	7	-	2,100
2011	13	13	-	11	11	-	3,600
2012	9	9	-	9	9	-	2,700
2013	28	19	9	25	16	9	6,000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전남도 공중목욕장 사업을 농어촌 주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사업이라고 판단하여 해남 북평면 100호 공중목욕장 개장식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축하 화환을 보내 왔으며, 2014년도부터 '작은목욕탕' 사업으로 시범운영 하는 등 정부와 전국 자치단체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전남도는 공중목욕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건강관리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농어촌 어르신들이 활력 있는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6. 응급의료헬기 도입 · 운영

2010년 어느 늦은 여름날 오후 119 상황실에 긴급하게 응급벨 소리가 울려댔다. 신안군 어느 마을에서 걸려온 환자 이송 요청 전화였다. 주민 김모(60)씨가 농기계 작업도중 팔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과다출혈로 인해 현재 쇼크 상태가 지속되어 생명이 위독하다는 내용이였다.

119상황실에서는 가까운 소방 파출소에 연락을 하여 119구급차를 출동시키고

이송 가능한 배편을 알아보았으나 해상의 높은 파도로 인해 선박을 통해 이송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119상황실에서는 긴급히 소방항공대에 헬기를 요청하여 환자를 이송토록 하였다. 소방항공대에서 접수 후 헬기가 최소한의 응급처치 장비와 약품을 탑재하고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여 이륙하기까지 30분가량 걸렸고, 환자가 있는 섬마을 헬기장에 착륙하여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옮기기까지는 1시간이 훌쩍 넘는 시간이 걸렸다. 또한 소방헬기로 환자를 이송하는 동안 환자의 상태가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었으나, 최소한의 응급처치 장비 밖에 없는 상황이라 모두들 기도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이송된 환자는 병원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으나 후유증으로 인해 긴 시간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김씨는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한 생각이 든다고 회고했다. 조금만 늦게 병원에 도착을 하였다면 귀중한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섬에 사는 주민이라면 한번쯤 주변에서 겪었던 상황으로, 섬에 사는 사람들은 이를 숙명이라 여기며 살아왔다.

2011년 9월 23일 전남도 하늘에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후 응급의료 헬기)가 취항하면서 섬 주민들이 숙명처럼 여기며 살아야 했던 아픔은 어느덧 과거 속 기억이 되었다.

전남도는 2011년초 보건복지부에서 응급환자 이송 취약지 중 도서지역을 포함한 6개 시·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응급의료 전용헬기(가칭 닥터헬기) 운영 사업에 공모했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219개의 섬을 가진 아름다운 지역이며, 296개의 유인도서를 보유하고 있고 이중 134개 섬이 의료인이 전혀 없는 의료 취약지역으로, 섬 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응급헬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계속적으로 요청하였다.

그 결과 전남도 목포한국병원과 인천광역시 가천의대 길병원이 최종 선정되어 전국 최초로 응급의료 헬기를 운영하게 되었다.

2011년 9월 26일 오전 11시 23분 목포한국병원 운항관제실에 갑자기 벨 소리가 울려댔다. 신안군 비금도 신안대우병원에서 걸려온 환자이송 요청 전화였다. 주민 강모씨(87세,여)가 혈색소 수치 및 혈압이 낮아 위장관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병원 전원이 필요한 환자였다. 이송 요청전화는 목포한국병원 문원식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김동선 응급구조사, 운항관리사가 동시에 연결되어 일제히 출동 준비에 들어갔다. 김진환 운항관리사는 비금도 기상 상황을 확인 후 기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출동 요청자에게는 가장 가까운 인계 점을 안내하였다.

의료진은 의료장비를 갖추고 병원 옥상헬기장으로 신속히 이동하였으며 응급의료 헬기는 F1경주장 대기현장에서 이륙하여 병원 옥상헬기장에서 의료진을 탑승하여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신고 접수 8분만에 헬기가 날았고 20분만에 도착했다. 앰블런스로 헬기장에 옮겨져 있던 강씨에게 의료진은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초음파로 복부 상태를 검사했다. 심근(心筋)에 장애가 있는지, 복부 장기(臟器)에 출혈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아울러 혈압·심전도·혈액 산소량, 폐의 환기 상태를 체크했다. 자동 약물 주입기로 링거액을 주입했다. 불과 3~4분만에 이런 처치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됐다.

이어 환자의 상태를 병원에 알리고 그에 맞는 준비를 지시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에 대기하던 응급의학과·신경외과 전문의 등이 강씨에게 필요한 검사와 처치를 실시하였다. 전화 접수에서 병원 도착까지 걸린 시간은 50분. 평소대로 앰블런스와 선박을 이용했다면 3시간이 더 걸렸을 것이다. 환자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시간이다.

응급의료 헬기의 첫 비행은 성공적이었다. 치료시기를 앞당겨 후유 장애 가능성을 줄였다. 의료장비가 없는 소방헬기였다면 응급의학 전문의가 탑승해도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응급헬기를 이용하자 헬기 내 각종 첨단 의료장비를 활용해 전문의가 검사·투약을 결정했고 치료는 신속히 진행됐다.

목포한국병원 항공의료팀은 오상우 응급의학과장을 팀장으로 응급의학 전문의 5명, 간호·응급구조사 6명, 기장 5명, 운항관리사, 정비사 등 24명이 팀을 이룬다. 당직 의사는 방화(防火)·방전(防電) 기능이 있는 항공복을 항상 입고 있다가 곧바로 출동한다.

응급의료 헬기는 항공 이송중 응급환자 치료를 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 심장제세동기, 이동형 초음파기, 환자 감시 모니터 등 각종 응급장비와 응급 의약품을 탑재하고 있으며 현장처치 능력을 갖춘 응급의학전문의와 구조사, 간호사가 탑승하여 30분이내 현장에 도착하여 응급환자를 사고현장에서부터 전문적인 응급치료를 하면서 의료기관까지 신속히 이송하는 하늘을 나는 응급실인 것이다.

2014년부터 정부는 응급이송이 가능한 각 부처 헬기 83대를 단일 운영체계를 도입하여 공동 활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전남도에서도 응급헬기 1대, 소방헬기 2대, 해경헬기 5대, 산림청헬기 4대 등 총 12대를 가용 가능한 응급의료 이송자원으로 공동 활용하여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할 계획이다.

또한 섬 지역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주간 및 야간에도 쉽고 빠르게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헬기 착륙장 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응급의료 헬기는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소중한 생명지킴이로서의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7. 은퇴의사 초청 행복의원 개원

전라남도는 타 지역에 비해 의료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도서 중 유인도서는 전국 486개소 중 전남에 296개소로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보건 의료시설이 있는 지역은 99개 도서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어촌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은퇴의사를 초빙하여 ‘행복의원’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절실했으며, 이는 농어촌을 떠나는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는 지역,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책 중 하나였다.

전남도는 2009년 6월 22일 은퇴한 의사를 보건지소에 배치하거나 외딴 지역에 살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모집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했으며, 이는 매년 감소되고 있는 공중보건역사의 제도적 보완은 물론 도서지역 정주의식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은퇴한 의사를 모집하여 보건지소 및 도서, 오·벽지에 배치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의사는 도서, 오·벽지에 배치하고,

치과의사, 한의사는 미 배치된 보건지소에 배치한다는 기본방침을 수립하였다. 또 진료장소, 거주시설 및 의료장비·의약품 등은 시군과 협의하여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비 및 식비 등 최소한의 실비보상계획을 세워, 은퇴의사 등 전문가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한 인터넷접수창구(남도친구들) 설치 및 모집공고를 시작하였다. 대한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및 시·군 등에 자원봉사 은퇴의사 추천을 협조 요청하는 한편, 은퇴의사 모집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신문, 방송 등) 및 수도권 등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방문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였다.

마침내 전남도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1969년도에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뉴저지 파사익병원, 버지니아주 마리뷰 병원, 텍사스주에서 가정의학, 소아청소년과, 2005~2010년 중국과학기술대학 의무실장 겸 간호대 협력교수로 근무하신 정우남(당시 68세) 은퇴의사를 맞이하게 되었다.

전남도는 우선 도서지역에 ‘행복의원’을 개설하기로 내부방침을 결정하고 여수시,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완도군에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해움에 따라 2009년 7월에 은퇴의사 활용계획을 수립하였고, 2011년 5월 은퇴의사 1차면담 및 진도군 현지방문, 2011년 7월



행복의원 1호 현판 전달

은퇴의사 2차면담 및 완도군 신지면, 노화면, 보길면을 방문한 후 완도군과 세부추진계획을 협의하였다.

완도군 노화 청년회에서는 소아청소년과 배치를 희망하였고, 노화읍, 보길면, 소안면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세대수는 3,145세대로, 관할인구는 5,088명이며 3개지역의 14세미만의 어린이는 2천여명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사가 반드시 필요했다.

특히, 노화읍과 보길면은 윤선도 유적지, 해수욕장 등 관광지로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이며, 수산물 중 전복, 톳, 미역 등의 주생산지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완도군과 협의한 결과 숙소는 보길면 소재 펜션을 우선적으로 임대 하고, 은퇴의사의 숙소는 도비와 군비를 투입하여 신축하게 되었 으며, 향후에는 농어촌구조 개선 특별회계 또는 국민건강증진 기금 에서 주거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게 되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은퇴의사 초빙을 통한 ‘행복의원’에 대한 디자인 심의를 거쳐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추진하여 2011년 10월 12일 등록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전남도의 끈질긴 은퇴의사 숙소건립비 지원요청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아들여 2012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지침 일부를 개정하여 건립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일부를 개정, 2014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정하였다.

한편, 전남도는 행복의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한 분의 은퇴의사를 찾았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1970년도에 졸업하고 원주 기독병원을 거쳐 1974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뉴저지(NEW JERSEY) 종합병원과 휴스턴에서 내과 전문의로 38년동안 개업하시다가 2011년 12월 은퇴한 박준일(69세, 강원도 원주)씨를 맞이한다.

이어 2013년 8월 신안군 장산, 하의, 신의면을 시찰한 후 최종적으로 신의면에 근무를 희망하게 되어, 숙소 건립과 진료실을 전면 개·보수를 거쳐 2014년 4월부터 진료를 시작하게 되었다.



행복의원 1호 현판(상표등록 : 2011. 10. 12.)

보건복지부에서도 계획은 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한 시책을 전남도에서 최초로 추진하여 두 번째 행복의원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사회봉사 의지가 있는 은퇴의사를 꾸준히 초빙하여 '살기좋은 전남, 살고싶은 전남'을 만들다 보면 200만 인구회복도 머지않은 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8.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개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노령화는 암 등 난치성, 만성질환자 증가로 이어져 의료비, 약제비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전남도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환자중심의 통합의학이 실현된다면 의료비 절감은 물론 국민 건강 증진과 함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통합의학은 현대서양 의학을 기초로 전통의학인 한의학과 의학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보완대체요법을 융합한 환자중심의 새로운 의료분야이다. 서양·동양·보완대체의학이 한데 어우러져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단순히 질병의 증상만 없애는 치료가 아닌, 몸과 마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치유를 의미한다.

전라남도는 정부에서도 '통합의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던 2007년 보완통합의학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2008년 보완통합의학 Pre-박람회를



행복의원 2호 현판



행복의원 2호 현판 전달장면

거쳐 2010년 “그린건강, 인간중심 헬스케어”라는 주제로 전국 최초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가 21세기 의료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환자중심 통합의학의 서막을 올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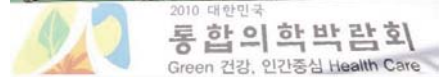
2011년 11월 전라남도는 통합 의학박람회 명칭을 특허청에 정식 상표 등록함으로써 통합의학박람회 추진은 물론 통합의료센터 건립 등 타 지역과 차별화 할 수 있는 통합의료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상표는 전남지역의 푸른 자연과 맑은 정신, 녹색의 땅 전남이 어우러진 환경 속에서 인간(人)이 중심이 됨을 상징하고 있다. 녹색은 녹색의 땅 전남의 청정자연을 의미하고, 청색은 통합의학의 세계화를, 빨강색은 장흥 천관산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흰색은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인간(人)이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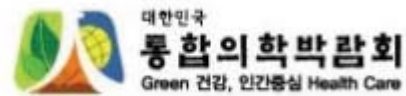
세계보건기구(WHO)는 참건강(웰빙)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21세기 의학의 축이 병중심에서 웰빙중심으로 옮겨감에 따라 통합의학 이용 인구도 증가추세에 있다. 예컨대 미국의 국립 보완대체의학연구소(NCCAM)설립, 유럽연합(EU)의 『전통 약초 의약품 명령』통과, 중국의 중서의결합의사(中西醫結合醫師)제도 도입 등 세계각국이 통합의학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양·한방 의료집단의 상호불신으로 환자진료에 통합의학을 접목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으나 최근 양·한방 협진병원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이런 시대적 흐름을 미리 파악한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2010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를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통합의학에 대한 비교우위 선점 및 양·한방·보완대체의학의 조화에 일조하였다.

장흥에서도 한참 더 들어가야 하는 천관산 자락에 박람회장을 펼치며 과연 ‘통합의학이라는 생소한 주제가 이 먼 곳까지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또 그들은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수없이 많이 했으나 기우였을 뿐 해가 거듭 될수록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람객들의 반응이



2010 통합의학박람회 개막식



통합의학박람회 상표 등록

폭발적이었다.

특히 ‘홍채 체험진단’은 간단한 눈(홍채)검사로 몸의 건강상태, 성격, 직업 등을 알아볼 수 있어 관람객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학술관에서는 명의·명사 강연, 통합의학관련 학술 심포지엄이 열려 대한민국통합의학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였고 아토피 등 건강관련 어린이·청소년연극을 상시 공연함으로써 유소년층을 박람회장으로 이끌어냈다.

2013년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에는 “몸과 마음의 치유, 통합의학”이라는 슬로건으로 12개 주제관과 14개 행사를 운영해 가톨릭성모병원, 원광대 한방병원 등 국내 유수의 의료기관이 대거 참여해 관람객들의 검진과 체험활동을 돕고, 환자의 질환에 대해 양·한방 의사가 함께 진료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환자중심 통합의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 일본의 배꼽안복법, 중국(저장성) 중의학대학 의료진의 독립부스 참여, 인도의 아유르베다 등을 통해 외국 통합의학 사례를 전하며 박람회의 국제화를 꾀했다.

부족한 예산, 적은 인력, 접근성이 매우 낮은 지리적 위치 등 박람회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통합의학박람회가 전남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공식 상표 등록은 200억원의 브랜드가치를 낳았고, 천관산 일원을 통합의학과 헬스케어 중심지로 육성한 결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428억, 고용 파급효과 439명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타 지자체의 한방박람회와 차별화된 콘텐츠 구축을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1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는 통합의학박람회는 매년 40만명의 관람객을 끌어 모았고 전국의 통합의학 전문가들이 즐겨 찾는 명실 공히 대한민국 대표 건강축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여기에 2014년, 2015년 더욱 발전된 박람회를 더해 2016년에는 대한민국에서 국제로 무대를 옮겨 통합의학에 대한 관심과 시선을 집중시킴으로써 관련제도 마련을 앞당기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하면서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를 추진중이다.

2016년 개최를 목표로 실시한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기본계획 용역 조사 결과



홍채 체험진단

사업비 190억, 외국인 6만명을 포함한 관람객 95만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통합의학의 비전이 담긴 기본계획서는 금년 1월 보건복지부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고 이제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와 국제행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9. 통합의료센터 건립

과학적 근거를 중요시하는 서양 의료 체계가 인류의 건강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급속한 환경의 변화로 인류가 겪고 있는 질병 또한 더욱 복잡·다양해졌고, 서양의학만으로는 한계에 부딪치게 되면서 서구 국가들이 먼저 동·서양 의학과 보완대체 의료를 아우르는 통합의학에 관심을 갖고 제도권에 포함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통합의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부족과 제도적, 정책적 지원 미흡으로 인해 아직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대로는 외국의 통합의학을 도입해야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과 통합의학이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적 의료비 경감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급부상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전남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우선 전남의통합의학 산업 육성 의지를 알리고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2007년 10월 「통합의학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미국, 일본, 독일 등 3개국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12월에는 한중 동양의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또한, 통합의학 관련 기관, 병원 등과 협약을 통해 다방면에 걸친 협력관계도 구축하였고, 이렇게 쌓아올린 네트워크 자원을 바탕으로 2010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의학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이러한 노력들은 무형의 자산으로써



2016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통합의료 산업 육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고, 이를 구체화할 첫 번째 기반 시설인 「통합의료센터 건립」 사업의 원동력이 되었다.

먼저 2011년 3월 통합의학 산업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에는 「통합의료센터 건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이를 근거로 관련 부처를 여러 차례 방문해 통합의료센터 건립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방위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통합의료센터 건립 사업 유치가 순탄치만은 않았다. 비도심 지역에 설립하는데 대한 우려와 타당성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되었고, 이미 2010년에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중인 대구 통합의료센터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굳건한 신념을 갖고 수년에 걸쳐 추진해온 사업을 첫 단추를 끼워 보지도 못하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겹겹이 쌓여 있는 난관을 각개격파식 으로 돌파하기 위해



통합의학 국제심포지엄(2007년 10월)

전남만의 논리를 만들고 타당성을 확보하는 끈질긴 도전이 시작되었다.

우선 ‘도시형’ 시설인 대구 센터 와의 차별성으로 장흥군에서 확보한 통합의료센터 부지의 자연친화적 특성과 인근 「LOHAS 타운」과의 시너지 효과를 부각시켰다. 또한 수년간 지속해온 전남의 추진 의지와 우드랜드, 소금집, 편백나무 치유의 숲 등 최적의 자연환경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통합의료 신제품 치료제로 활용가치가 높은 천연자원 및 한방 자원과 바이오 관련 연구소 등 구축된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노력들에 힘입어 정부에서도 통합의료센터 건립 사업의 필요성을 받아들였고, 마침내 2012년 1월 사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실시 설계 등을 위한 국비

10억원을 확정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통합의료센터 건립이 확정됨으로써, 전남의 오랜 목표였던 통합의학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었다. 곧바로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의 시발점이 될 통합의료센터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2012년 3월, 전남도와 장흥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4월에는 통합의료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 하였다.

이제는 통합의료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고민할 때이다. 통합의료센터 건립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 산학연관으로부터 관심을 끌어 모으기 위해 2012년 6월 일산 킨텍스에서 대대적으로 「대한민국 통합의료 정책포럼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전남의 통합의학산업 육성 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하였고,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실현” 문구를 새긴 통합의료센터 현판 제막식도 가졌다.

당초 통합의료센터 기본 방향은 연구를 중심으로 한 시설이었다. 하지만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미비한 상황에서 운영 효율성 확보와 장기적으로 통합의료 체계 구축 등 핵심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교육, 연구, 치유 중심으로 기능 확장이 요구되었고, 이는 총사업비 조정과 건축 연면적의 증가를 수반하였다.

이에 따라 기 완료한 기본계획 결과를 근거로 2013년 1월부터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해당 부서에서는 건설비 증액과 건축면적 증가는 불가하다는 답변만을 내놓았다.

이때부터 장장 7개월 동안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사투가 시작되었다.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계획을 보완해



장흥 통합의료센터 위치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업무협약(2012년 3월)



전남 통합의학 비전 선포식(2012년 6월)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기를 수십 차례 반복하였으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최종 승인은 쉽사리 해주지 않았다.

기능 확장은 통합의료센터 존재 의의와도 결부되는 중대한 문제였기에 절대 물러설 수 없었다. 관련 부처 문고리가 닳도록 수시로 드나들며 건의한 결과, 마침내 2013년 7월 총사업비 조정요구서가 승인되었다. 이후 지연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2013년 10월 기본·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였다.

통합의료 산업은 세계적인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다. 비록 시작은 다른 나라보다 늦었으나 우리나라의 우수한 양·한방 의료와 전남이 보유한 천혜의 치유자원을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활용한다면, 장흥 통합의료센터를 시작으로 전남이 세계적인 통합의료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될 날도 그다지 멀지 않았다.

10. 여성 취업·창업 박람회

우리나라 여성은 출산 및 육아, 가사노동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어 자신의 커리어와 현 실정에 맞는 취업 기회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전남의 영세한 기업은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기업 홍보와 취업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남도는 도내 500여개 기업과 구직여성 1,830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전남 여성 사이트에 구인·구직 데이터를 구축하고, 2007년 여성만을 위한 취업·창업 박람회를 『취업! 내 인생의 반올림# 그 새로운 시작』이라는 부제로 처음 개최하였다.

2007년 목포에서 개최한 첫 박람회에는 도내 824개 기업과 5,900여명의 여성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통합의료센터 조감도

참여하였고, 1,042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첫 여성 취업박람회 후, 전남도는 2008년부터 ‘전남 여성 취업·창업 박람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매년 1회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소재하고 있는 목포, 여수, 순천 3개 시를 순회하며 개최하였다.

박람회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 예정자들에게 취업 컨설팅과 틈새시장을 겨냥한 창업아이디어도 함께 제공하여 여성이 지닌 특성과 장점을 최대화하였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대부분이 전업주부로 오랜 시간을 가정에서만 보내왔기 때문에 박람회에 참여한다는 것을 어려워하는 특성이 있어 그저 알자리만 제공하는 박람회가 아닌, 여성을 위한 하나의 문화축제의 장으로 운영하였다. 이력서 작성요령을 물론, 면접 메이크업과 이력서 사진촬영을 통해 잠재되어 있는 취업의 욕구를 자극하면서도 유모차를 끌고 와도 편안하게 취·창업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놀이방도 함께 운영하는 등 여성을 배려하는 박람회장 운영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남성에 비해 활동의 제약이 많은 여성이 구직활동을 위해 박람회 개최지역으로 찾아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몇 시간씩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구직자들로,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인원은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취·창업 인원수도 줄어들어 2010년에는 50%로 대폭 감소하여 박람회 존재가 불명확해졌다.

특히, 그동안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는 목포, 여수, 순천 중 1곳을 선정하여 연회 개최하여 왔던 박람회는 2011년 개최 후 변화가 절실했다. 여성의 접근성을 높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했다. 이에 전남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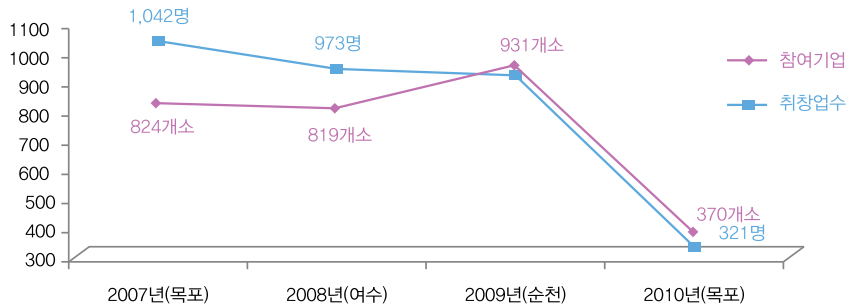
2007년 전남 여성 취업박람회 개최



구직여성이 구인기업체 현황을 살피고 있다

권역별 개최를 계획 하였고, 전남 여성 취업·창업 박람회는 2012년부터 3개 시와 함께 군단위 최초로 장성군을 포함하여 4개 권역을 나누어 순회 박람회를 개최 하고 있다. 2012년 11월 7일에 장성군 흥길동체육관 에서 군 단위 최초로 취업·창업 박람 회를 개최하여 전남 북구권역의 182개 구인업체와 1천여명의 여성구직자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대성황을 이루 었다.

전남 여성 취업·창업 박람회는 2007년 개최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도내



2007~2010년 박람회 참여 기업체와 취·창업인원 추이

여성채용 수요가 있는 업체들을 발굴하고 구직여성 5,000여명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까지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의 취업·창업 박람회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활동 중인 취업설계사와 전남광역 지원본부에서 각 시·군에 파견한 취업설계사 53명 모두 여성이다.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과 같은 주부 이고, 자기계발의 욕구와 사회진출, 경제활동을 절실히 원하는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성 취업·창업 박람회는 그저 일자리만 연계하는 다른 박람회와 차별된다. 가정에서 육아와 가사에 지친 여성들이 서로를 공감하는 문화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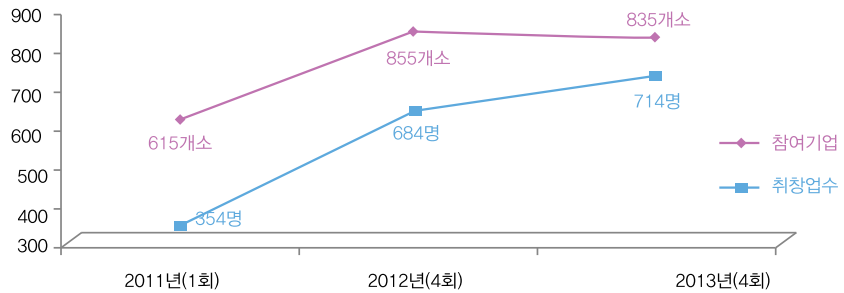


박준영 지사의 박람회장 순회 장면



북부권역 박람회장에서 현장 면접 중인 여성구직자

장이자 소통의 장이다. 앞으로도 전라남도는 여성이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응원하고 지원할 것이다.



2011~2013년 박람회 참여 기업체와 취·창업인원 추이

2014년 전남 여성 취업·창업 박람회 개최 일정

개최지역	목포시(서부권)	여수시(동부권)	순천시(동부권)	장성군(북부권)
개최일자	3. 27.(목)	9. 30.(화)	10. 8.(수)	10. 29.(수)
개최장소	목포실내체육관	흥국체육관	팔마체육관	홍길동체육관
참가 시군	9개 시군	2개 시	5개 시군	6개 시군
	목포시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성군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11. 전남여성플라자 설립·운영

전남도는 민선 3기 도지사 공약사업 및 20대 도정과제의 하나인 '여성우대의 사회기풍 진작'을 추진하기 위해 2008년 12월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전남여성플라자'를 건립하였다. 전남여성플라자는 남악신도시 도청이전과 더불어 기존 도 여성회관의 집행기능과 여성개발원의 정책개발기능을 통합한 것으로 전남여성 관련 콘트론타워 역할을 한다.

건립 추진배경을 보면, 2003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남도 현안사업으로 지원을 건의하고, 2003년 6월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로부터 45억원의 특별교부세와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균특예산 5억원을 확보하여 건립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2004년에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산업경영연구소에 공공건물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해 완료하였고, 2006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후 2007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12월에 완공하였다.



총 공사비 191억원을 들여 2009년 4월 29일 개원한 전남여성플라자는 '여성의 힘, 세상의 빛'을 캐치프레이즈로 전남여성의 복지 증진, 능력 개발, 정책개발의 산실로 연면적 총 8,109㎡(2,470평)에 지상 5층의 친환경시스템을 갖춘 최신행 건물로, 주요 시설로는 여성문화박물관,

북카페, 공연장, 교육장, 하늘공원, 식당, 연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 중 건물 2층에 자리한 전남여성문화박물관은 '변화의 흐름, 그 중심은 여성'이라는 주제로 100년의 역사 속에 묻어나는 전남 여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삶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 연중 여성작가들의 기획전이 활발히 열리고 있다.

북카페 '혜오휴(생각이 자라는 나무)'은 여성과 가족, 아동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315석 규모의 공연장은 각종 발표회와 학술심포지엄은 물론 가족음악회, 가족영화제, 연극공연 등이 가능한 다목적



시설을 겸비하여 지역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여성창업보육실은 여성창업자와 예비창업자에게 사무공간과 사무기기, 경영 및 홍보를 지원하며, 현재 중소기업청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사업에 선정된 Art & Design Studio (대표 추이안)를 비롯한 5개 업체가 입주하여 경영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시청각 교육과 회의, 강연을 할 수 있도록 110석, 55석, 40석 규모의 강의실 7개를 갖추고 전남여성들의 능력개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취·창업능력을 기르기 위한 정보화교육실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5층에는 편백나무와 황토벽지로 마감한 친환경 연수실 2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방에는 전남 도내 23개의 섬이름을 갖고 있다.

전남여성플라자는 광주에 위치하고 있던 기존 여성회관 기능을 발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여성의 문제와 복지에 관한 정책 개발·조사·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종합센터다. 뿐만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교육·훈련 등을 통한 전남여성 네트워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여성의 능력 개발과 가족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여 녹색전남의 비전 실현’을 경영 목표로 행정지원실, 정책연구실, 교육훈련실과 3개 위탁기관(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남새일지원본부, 전남1366)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맞춤형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정책연구실은 양성평등 정책실현의 기초 도구인 성별통계를 작성하고, 여성 친화형 사회적기업 모델 연구, 여성친화마을 개발·연구, 지역여성정책의 성 주류화 방안 모색 심포지엄 등을 통해 지역여성의 정책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2011년에 ‘전남형 여성친화도시 모델 개발’, ‘농어촌 고령 친화형 사회적 기업 모델 발굴 연구’

등을 진행하였고, 2012년에는 '전남 체험마을 여성인력 역할증대에 관한 연구', '농촌지역 중년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으며, 2013년에는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방안 연구'와 '전남해녀 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외 계층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교육훈련실에서는 여성 및 마을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성인지력 향상교육, 양성 평등 의식교육 등을 통해 양성평등의 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고, 취업설계사, 남도음식 꾸밈이(코디네이터), 가정폭력·성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해오고 있다.



또한 2012년에는 여성창업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여성창업자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서비스 향상 교육, 창업 준비 전략, 마케팅 전략, e-비즈니스 교육 등을 실시하여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한 창업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갔다.

이와 더불어, 2010년에는 '광역새일지원본부'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되어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취·창업 연계 활동 등을 위한 원스톱 종합취업지원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호남권 유일한 '정책 분석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전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개소하고, 지역사회 성 주류화 사업 추진으로 양성평등 사회 구축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2008년 12월 건물 준공과 함께 같은 해 12월 23일에 제1대 원장에 이영세씨를 선임했다. 이 원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 정보교류 기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의 육성을 목표로 전남여성

플라자를 운영하고 있다.

1대에 이어 2011년 1월에 제2대 원장으로 최순애씨가 취임했다. 최 원장은 여성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전남광역새일지원본부를 거점으로 여성 취업을 촉진하고, 여성창업보육교실을 통해 여성 창업자 육성에 전념하였고, 전남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를 중심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성 평등 기반 구축에 힘써 나가고 있다.

또한 전남이 배출한 여성인물 중 현대까지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70명에 대한 역사적 자료 고증, 현존 인물 인터뷰 등을 총망라해서 정리한 ‘전남여성’을 발간하여 전남여성의 저력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전남여성플라자는 여성이 무한한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수요자 중심 정책연구를 통해 여성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여성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여 행복을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12. 여성발전기금 조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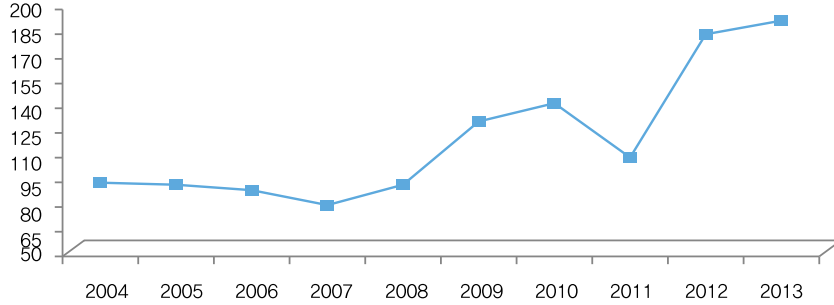
전남도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따라 1997년부터 30억원을 목표로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2006년까지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은 전남도와 시·군이 매년 공동으로 각 1억 5천만원씩 부담하여 2006년 말까지 35억원의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전라남도는 여성복지 증진 및 여성단체 지원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오는 2028년까지 총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2007년부터 매년 3억원을 출연하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연말 기준 기금 보유액은 60억원으로 목표액의 60%를 달성하였다.

여성발전기금은 2001년부터 이자 수입금인 1~2억원 범위 안에서 여성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기관은 여성관련 단체와 기관, 그리고 대학 등이며 매년 초에 사업을 공모하여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2001년에 6천9백만원을 시작으로 2005년 9천 7백만원, 2010년 1억 4천만원, 2012년 1억 8천만원, 2013년 1억 8천 2백만원을 집행해 매년 약간씩 증액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이 공모에 의해 선정된 사업으로 매년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사업실적과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를 심사·평가하여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 사업성고가 높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발전기금 집행내역

전남도는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의 성과 확대를 위해 그동안 소규모로 추진해온 유사사업은 도 단위 협의체를 중심으로 통합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부응해 여성단체의 주체로 이루어지는 녹색생활 문화의 확산과 관련된 사업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여성단체 나무심기 행사

또한 지난해 일본사가현 츠바사노카이 회원 15명을 「순천만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 초청하여 양 단체 간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13. 8. 19.)하는 등 앞으로 지속적인 왕래를 함의 하였으며, 올해도 전남도 여성단체에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문화공연 장면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이주여성)의 외국어(모국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외국어 강사 양성과정을 시·군 추천으로 23명(일본 4, 중국 7, 베트남 11, 필리핀 1) 선발하여 지난 2013년 7월부터 10월말까지 총 85시간(기초 80, 심화 5) 교육·수료하여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 후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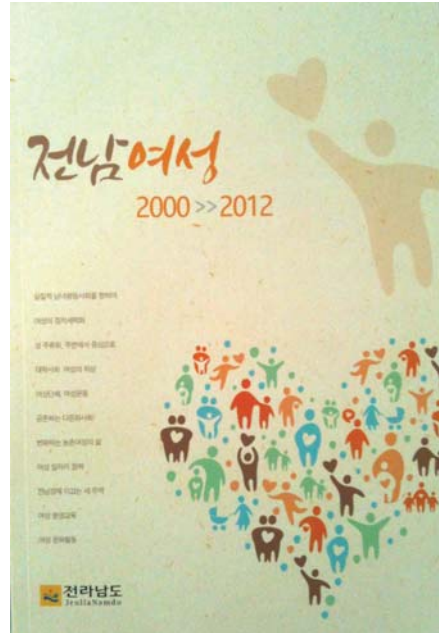
전남도에서는「전남여성100년」을 펴낸 지(’05년 2월) 10여년이 경과함에 따라, 2000년대 여성들의 다양한 영역 활약상을 조명할 수 있는 「전남여성(2000~2012)」을 총 8장 429페이지로 구성하여 800부를 발간해 여성단체, 여성정책연구기관, 도서관, 사료제공자 등에게 배부하였다.

여성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등 총 4종 사업을 75회 운영하면서(12명) 모든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를 거치는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으로 그 중 1명은 현장 사업체에서 지원고용 훈련을 받아 보호 작업장에 취업하였다.

그리고 생활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래 간 성폭력의 상황, 학교 및 놀이터 등에서의 성폭력의 상황을 아동 및 지적장애 아동 눈높이에 맞추어 실시하여 성폭력 예방의 중요성과 함께 몸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청소년의 성매매 예방교육이 미흡하여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성매매위험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나 체계적인 가치관 교육을 실시할 강사가 부족한 실정으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강의안 구성과 실습을 통해 강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활용가능한 성매매 예방교육 인프라와 제반 환경을 구축하였다.

전남도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여성발전기금을 지원받은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성과보고회(사업평가)」를 개최하여 올해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였다.



전남여성 2000~2012



엄마와 함께하는 성폭력인형극

이번 보고회는 A~E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우수 사업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며, 부진하다고 평가된 사업은 사업비 감액 또는 지원 중단을 결정하였다.

한편, 이번 평가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서는 허투루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이 생겨 사업들이 본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전남도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서 제시한 '474비전' 달성을 위해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 및 일·가정 양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정치·경제·교육·농어업·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의 협의체 구성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개발 및 양성평등 실현 방안 강구를 위해 가칭 '맞춤형 여성가족복지 실현을 위한 포럼 운영'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주요 여성정책 평가 및 수요자의 의견수렴으로 수요자 맞춤형 여성정책·복지사업 개발을 한다. 광역 여성의원, 여성정책별 전문가, NGO단체, YWCA 등 기관·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며 정책개발포럼, 간담회, 성과보고회 등 총 6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에서는 지원 사업의 성과 달성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 실적이 부진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여성발전기금 지원 일몰제를 시행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13.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전남의 주요 현안은 인구감소를 막는 방법으로 출산장려정책 중 셋째 아기 갖기 등 아기의 울음소리를 동네 곳곳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의 여건상 임신을 해도 산전 진찰 등을 받아야 하는 병원이 없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인근도시로 원정 진찰을 다녀야 하는 불편함과 또한 결혼이주자가 임신을 했을 때 언어문제로 배우자와 함께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인근 도시로 나가야 하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특히 전남도내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시군을 파악한 결과 담양, 곡성, 구례, 보성, 영암, 함평, 진도, 신안 8개 지자체에 달했다.

전남도는 2008년 8월 운영 계획을 수립해 보건복지부에 사업 공모에 나섰으나 의료계와의 갈등 무료 순회 진료사업으로서 지자체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환자 유인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개원의에 미치는 악영향, 사업대상 제외지역(17개 시군) 임신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우선적으로 의료계와의 갈등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산부인과 의사 단체 등을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협조를 통해 갈등을 해소했다. 본 사업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익사업이며, 산부인과 미개설 농어촌지역만을 대상으로 추진 분만시는 검진기록부를 분만 의료기관으로 연계조치 등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것이다.

2009년 7월 보건복지부장관, 박준영도지사, 도교육감, 도의원, 민간단체 및 관련기관,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팀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만남의 광장”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발대식을 「아이낳기좋은세상」 전남운동본부 출범식과 함께 온 도민의 축복 속에 성대하게 치렀다.



마침내 2008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 공모 후 국고보조금 확정, 총 사업비 460백만원으로 검진차량, 골밀도측정기, 초음파, 심전도기, 체지방분석기 등 장비구입비를 지원받았다.

추진기관으로 목포시의료원에 공공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업무협약 후 2009년 4월에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전담 공중보건의사(산부인과 전문의)를 파견하고 같은 해 6월에는 차량 특장 및 도색, 의료장비 구입 장착을 하였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발대식과 함께 진료를 시작해, 그해 7월부터 보성군, 영암군, 함평군, 진도군, 신안군 등 5개지역 임신부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월2회 방문하여 산전 진찰 및 초음파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등 검사 위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검진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또 하나의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인근 도시에 산부인과 접해 있는 담양군, 자치단체장의 본 사업에 대한 불신으로 곡성, 구례 참여하지 않았다. 구례군은 2012년도부터 본 사업을 추가 지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곡성군은 금년 3월에 본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여 2014년 5월부터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예컨대, 영암군에서는 임신부들이 산전진찰 및 분만을 하려면 인근 목포시, 나주시, 광주로 원정출산을 가야하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다. 영암군보건소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임신부 109명 중 삼호보건지소 43명, 나머지 66명은 10개 읍면에 분포되어 있어 이동검진차량이 한 달에 두 번, 초에는 대불산단이 속해있는 삼호보건지소에서 중순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다.

문대원 산부인과 의사는 “이동산부인과가 운영되는 날에는 주로 직장여성 및 이주여성들이 이용하며, 언어소통이 불편하여 남편 또는 시부모를 대동하여 진찰을 받고 흐뭇해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며 “이주여성들이 낯선 나라에서 자국인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정보교환도 하는 만남의 장소다”고 말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 말까지 진료인원 5,430명(산과 4,061, 부인과 13,69)으로 이중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976명이 이용했다. 현재 전남도를 비롯해 경남, 경북, 충북, 강원도 등 5개 도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본 사업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진료현황은 약 20~30%대로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그러나 내국인의 활용도가 높고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의 수혜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앞으로 사업 운영비를 국비로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14.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2013년 3월부터 만0~5세 영유아의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되었다.

2012년 만0~2세와 5세의 무상보육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만0~5세 전 아동으로 무상보육이 확대되었다. 무상보육으로 전남도 영유아는 2012년 34천여명이 보육료 지원을 받았으며, 2013년에는 53천여명이 보육료 지원을 받았다. 또한 2013년부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0~5세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25천여명의 아동이 지원을 받았다.

무상보육 시행 후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내역

(단위 : 명, 연평균 아동수)

연령	2011년	2012년	2013년
계	50,529	53,241	53,215
0~2세	24,216	26,908	27,389
3~4세	19,316	19,187	18,341
5세	6,997	7,146	7,485



무상보육은 최근 저출산으로 출생 아동이 감소하고 있는 현 실정에 중요한 과제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가족구조에서는 가족내 자녀양육이 가능하였으나 지속적인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핵가족화 되면서 양육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사회적 성취욕구 증대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점차 확대되었으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양육문제 해결이 대두되었다. 또한 최근 양육의



어려움으로 출산을 피하고 있어 미래의 국가경쟁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유아무상보육은 이러한 저출산을 극복하고 여성인력을 활용한 필요성은 충분하나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하는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없이 시행하면서 지방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주게 되었다.

전남도는 2012년부터 보육료 예산의 급속한 증가로 지방재정 악화와 무상보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무상보육료 국비 지원 건의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하였고, 2012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던 박준영 지사를 중심으로 전국 시도지사들과 함께 영유아무상보육확대에 따른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등 무상보육재원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를 촉구하였다.

무상보육 시행 후 영유아보육사업 예산증가 내역

(단위: 억원)

재원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1,714	1,952	2,391	
국비	892	1,016	1,242	
지방비	계	822	936(14%↑)	1,149(23%↑)
	보육료	780	875	890
	양육수당	42	61	259

결국 2012년 이후 지속적인 무상보육 국비 상향지원 요구로 2014년에는 보육료 예산의 국비 지원분담이 15% 증가하여 다소 지방재정의 숨통이 트였다.

아울러 전남도는 많은 예산과 노력이 들어간 영유아무상보육이 부모와 아동 모두가 만족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무상보육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만0~2세아 무상보육이 시작된 이후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15일 오전 세종청사를 방문해 정홍원 국무총리와 면담하고 있다. 박지사는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체계 개선과 적극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 마을 앞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와 지원을 요청했고, 정 총리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사진제공=전남도

기획재 정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민주당에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을 건의하였고 박준영 지사는 중앙정부를 방문할 때마다 무상보육의 지원체계 개선 건의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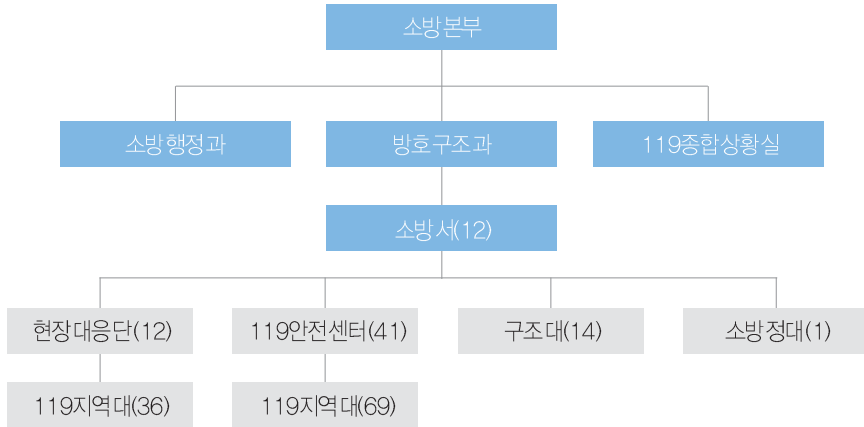
전남도는 앞으로도 영유아무상보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무상보육 지원체계 개선 건의도 지속적으로 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여성인력의 경제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15. 소방인력 3교대 실시

소방은 전통적 소방업무인 화재진압 업무와 함께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복잡·다양한 소방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구조, 구급 업무영역의 확대를 가져왔다. 현재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 뿐 아니라 테러를 포함한 각종 인적재난 업무까지 소방업무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도민의 안전욕구가 한층 증가 되었다.

전남도는 시·군지역의 재난발생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각 시·군에 12개 소방서와 12개 현장대응단, 41개 안전센터, 14개 구조대, 항공대, 소방정대, 105개 지역대를 설치하였고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다양한 소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림〉 전남 소방본부 기구표



문제는 소방공무원의 현실적 근무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소방공무원의 만성적인 업무피로 문제 등 직원복지와 삶의 질 문제는 항상 소홀히 취급되었으며, 타 공무원들과의 근무형 평성 부재로 직원 사기저하는 물론, 각종 재난현장 대응에서의 총체적인 소방력 약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전남도는 소방공무원 3교대 전면 시행을 추진했다. 신규채용 314명, 행정인력 감축 및 조정 52명, 지역대 통폐합으로 65명 인력을 확보하여 2010년 11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3교대 근무를 전면

전남 소방공무원 인원변화 추이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남도 소방공무원	1,541	1,584	1,564	1,563	1,563	1,745	2,059	2,062	2,066	2,066	2,066
도내 인구	1,994,011	1,976,465	1,954,828	1,944,962	1,938,690	1,934,153	1,940,455	1,938,136	1,933,220	1,931,716	1,931,716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1,294	1,248	1,250	1,244	1,240	1,108	942	940	936	935	935
화재 구조·구급 접수 건수	173,006	174,006	175,506	177,006	179,172	194,564	199,833	216,591	222,291	240,983	255,983

시행하여 업무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직원 사기진작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도민에게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재난현장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도내 시군에 소방관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4	2	3	5	2	2
신설	소 계	12	2	2	4	2	2
	소 방 서	2			무안		장성
	안전센터	7	신안안좌완 도고금	해남송지나 주빛가람	고흥봉래	화순동복무 안남약	
	구 조 대	2			무안		장성
	기 타	1			소방교육대		
이설	소 계	2		1	1		
	안전센터	2		함평	광양금호		

또한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청사 신·증축을 추진한 결과 2005년에 영광소방서를 신축하여 영광군과 함평군을 관할하게 하였다. 2011년 화순소방서, 2012년에는 강진소방서를 신축 개청하여 강진군과 장흥군을 담당하게 하는 등 소방서가 설치됨으로써 사다리차, 구조차 등이 추가 배치되고 그 결과로 화재는 물론 구조·구급업무의 수혜영역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로써 도내에는 12개의 소방서가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소방관서를 신설하여 상대적 소방수혜 소외지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아울러, 119안전센터는 11개소를 신·증축 하였고, 119지역대 25개소를 신축하여 소방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노력하였다. 또한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 기술능력을 연마할 수 있는 119소방종합훈련장 건립을 위하여 장흥군에 소재한 억불산 자락에 부지 54,509㎡를 확보하고 연면적 2,200㎡ 규모(훈련탑 7/1층 외 4개동), 총사업비 50여억원을 들여 2015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는 기반조성을 위한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119소방종합훈련장이 완공되면 소방공무원은 물론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소방관계자 등을 아우르는 교육·훈련시설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2014년에는 해남 송지119안전센터 신축과 함평 119안전센터 이설이 추진 중이고, 장흥 장동119지역대 이전, 무안 몽탄119지역대 증축, 신안 하의도 소방차고 신축을 계획하고 있어 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소방서비스가 제공되게 될 것이다.

한편, 안전센터·지역대 가운데 청사가 노후 협소하고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장비관리 및 긴급출동장애 등 소방 활동에 애로가 있는 청사와 근무환경이 열악한 청사를 대상으로 현대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총 520여건의 청사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나은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순소방서



강진소방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현장에 1차적으로 동원되는 소방차량의 현대화가 필수적이다. 전남도는 도민의 생활안전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한 장비를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차량 보강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4년부터 국고보조 88억73백만원 특별교부세 33억55백만원, 도비 375억64백만원 등 총 477억61백만원을 투자하여 총 476대의 차량을 교체·보강해 한 해 평균 48억원 예산으로 48대의 소방차량을 교체 및 보강하는 등 소방차량 노후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고가의 소방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 뿐만 아니라 국비지원이 절실함에도 중앙정부의 지원은 일부 사다리차, 구조·구급차량에 한정하고 있어 전체 소방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펌프차 등에는 지원이 되지

않아 차량 노후율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중앙에 건의하고 소방재원 마련을 위한 세원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내폭화차

구조차

구조구급장비

16. 태풍 등 자연재해 항구적 복구대책 마련

세계인구(70억명)의 절반이 도시에 거주하여 인구 밀집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2050년에는 세계인구의 70%(선진국 86%, 개발도상국 67%)가 도시에 거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은 저소득층 증가와 슬럼화로 무허가 주택 증가 등 재해취약 요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 나라는 경제성장에 집중한 나머지 무계획적인 도시 개발과 무분별한 생태계 파괴로 재해로부터 취약요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으로 배수시설 등 방재관련 기반시설 투자에 소홀하여 재해로 인한 인적·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일수록 안전에 대한 관심 및 의식 부족으로 방재활동이 저조하고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재해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과거의 기록을 초월하는 태풍·집중호우·강풍·해일 등 기상이변이 빈발하여 대형재난이 발생되고 있다.

전남지역은 그동안 해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고 복구는 땀질식 처방에 그쳐 피해가 반복되었다. 특히 전남지역은 태풍의 주요 이동경로에 있어 매년 반복되는 태풍피해(2002년 루사 3,797억원, 2008년 매미 2,741억원, 2012 볼라벤 3,713억원)를 줄이기 위해 항구적인 복구가 필요하였다.

최근 3년간 태풍피해 현황

년도별	태풍 이름	피해액	복구액
2010	덴무 (8.9~8.12)	인명 : 1명 (전남 0명) 재산 : 34억원(전남 11억원)	총 72억원 전남 18억원
	곤파스(9.1~9.3)	인명 : 6명 (전남 0명) 재산 : 1,674억원(전남 70억원)	총 1,798억원 전남 143억원
	말로 (9.5~9.7)	인명 : 6명 (전남 0명) 재산 : 6억원(전남 0.2억원)	총 4억원 전남 0.06억원
2011	무이파 (8.6~8.10)	인명 1명 (전남 0명) 재산 : 2,183억원(전남 851억원)	총 4,617억원 전남 1,654억원
2012	किन (7.17~7.19)	인명 : 0명 (전남 0명) 재산 : 15억원(전남 4억원)	총 35억원 전남 8억원
	볼라벤 덴빈 (8.25~8.30)	인명 : 15명 (전남 4명) 재산 : 6,365억원(전남 3,713억원)	총 10,113억원 전남 6,217억원
	산바 (9.14~9.17)	인명 : 0명 (전남 0명) 재산 : 3,657억원(전남 322억원)	총 8,415억원 전남 559억원

이에 따라 전남도는 2012년부터 건설분야와 농·수산분야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항구복구 실행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현장중심의 대책을 마련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항구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012년 태풍 볼라벤과 덴빈 등 연이은 태풍 피해를 계기로 신속한 복구계획

태풍피해 항구복구 T/F팀 구성·운영

팀장 (행정부지사) - 17명





태풍 복상에 따른 대응 대책회의



분야별 항구복구대책 보고회

및 항구복구를 위해 '복구계획 특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였다. TF팀은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예산 및 연구분야, 방재복구분야, 행정지원분야, 농업식품분야, 해양수산분야로 나누었고, 건설방재국, 농림식품국, 해양수산국, 행정지원국, 기획조정실, 농업기술원, 전남발전연구원 등이 분야별 팀원으로 참여했다.

2012년에는 2차례 TF팀 회의를 거쳐 분야별로 14건의 항구복구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제도개선 7건, 분야별 건의사항 22건을 발굴하였다. 발굴된 항구 복구대책으로는 농림분야에서는 축산시설 현대화, 과수 고품질을 위한 방풍림 조성, 다목적 사방댐 조성 확대, 해안지역 조생종 벼 조기재배 확대 및 우량 품종 보급, 쓰러짐에 강한 "호품 벼" 재배 확대, 시설원예(시설하우스) 시설 보강 및 설계기준 상향조정, 인삼재배시설 철재 및 해가림시설 보강 등이었다. 해양·수산분야는 방파제 등 항만·어항 시설 설계기준 강화, 가두리 내파성 시설기준 강화·보급, 선박 안전대피를 위한 다목적 인양기 설치 확대, 복합 다기능 부잔교 안전성 개선, 도서낙도 국제위성 통신용 위성전화기 보급 등이고 한옥분야는 용마루, 내림마루 기와 동선으로 묵도록 의무화, 한옥 신축관계자 교육실시 등을 발굴하여 개선하였다.

또한 방풍림조성 5개년 계획 수립, 다목적 사방댐 확대조성 5개년 계획 수립, 어항 및 항만시설 설계기준을 강화(어항 10년→50년, 항만 50년→100년), 전라남도 한옥 건축기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축산시설 현대화, 조생종 벼 조기 재배 확대 및 우량품종 보급, 가두리 내파성 시설기준 강화·보급, 선박 안전 대피를 위한 다목적 인양기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2012년부터 추진한 태풍피해 항구복구 대책을 주제로 건설분야 및 농·수산 분야별 실행계획과 제도적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적으로 대응분야에서 2013년 4월 소방방재청 주관 재난관리 단계별 방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전남도는 향후 하천정비사업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법을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모든 하천사업은 하천 기능개선에 맞추어 공학적 측면에서만 검토되고 있어 하천 인근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이 하천에 친숙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친수 기능이 가미된 공원하천으로 개발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재난 위험요소 및 풍·수해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 현장중심의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17. 기초 소방시설 보급

전남도는 사회적 취약지역, 계층에 대한 자율소방 안전의식 확산과 안전생활 도모를 위하여 전기화재 저감대책,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홀로사는 노인가구 및 농·어촌가구 등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예컨대, 최근 3년간 범도민 화재예방활동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와 유사시 신속대응을 위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사업을 추진, 화재시 대피능력이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46,722가구 및 농·어촌가구 29,496가구에 대해 기초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화재발생 조기 인지·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적극 노력하였다.

또한 1가정 1소화기 갖기 보급을 높이기 위하여 공직자 가정부터 소화기를 솔선수범하여 비치토록 하고 각종 시상품에 소화기를 사용토록 시·군 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청 등 각급 유관기관·단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기초소방시설 보급 현황

구분	기초생활수급가구			농·어촌가구		
	계	소화기	감지기	계	소화기	감지기
2011~2013	46,722	6,071	41,852	29,496	5,671	26,090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최근 5년간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화재원인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27.6%로 가장 높고 불티, 아궁이 화기취급 부주의, 방화순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전기로 인한 화재가 많은 것은 노후된 시설과 거주자의 전기특성 이해 부족 및 평소 화재 안전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전남도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연인원 1,680명을 투입해 76,218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전기시설 등이 불량한 6,695가구의 낡은 전선교체 등 10종 3,434점을 교체·정비하였다. 또한 주민 78,540명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택화재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였다.

최근 3년간 기초소방시설 보급 현황

추진기간	점검대상	점검결과	현지사정	소방교육
2011~2013	76218가구	양호 69523가구 불량 6695가구	6,695가구	78540명



주택소방안전점검



소방안전교육

전남지역 소방 취약지구는 다중이용업소이다. 때문에 전남도는 다중이용업소의 설치 단계부터 안전시설의 완벽한 시공과 영업 개시 이후 평상시에도 성능과 기능이 상시 유지·작동되도록 관리체계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화재저감 및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현황

계	유흥 주점	유흥 주점	노래 연습장	단란 주점	PC방	골프 연습장	고시원	기타
5,274	1,613	1,019	967	599	444	200	42	390

예컨대, 2012년에는 24건의 화재로 189백만원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나, 2013년에는 18건의 화재로 81백만원의 재산피해로 화재발생 건수는 6건, 재산피해는 10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013년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시 피해자의 보호와 업주의 안전에 대한 자기책임 실현을 위한 화재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행정지도를 통하여 가입대상 4,086업소 전 대상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다중이용업소 자율점검 당부



공단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또한 전남도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또는 11조」에서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장애물 설치 등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관계자들의 책임의식 부족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관심과 신고를 유도하고 관계자의 책임의식과 도민의 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를 제정(2010.4.13)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307건의 신고를 받아 현장 확인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법행위로 판명된 45건에 대하여 2,900천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전남도는 화재 등 재난발생시 다수의 인명과 많은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313개소를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화재예방과 진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소방환경안전평가회를 실시하였다.

소방간부공무원으로 팀을 구성 대형화재취약대상을 방문, 화재 등 재난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토론회와 대상별로 적합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소방간부공무원 전체가 취약대상에 대한 위치, 구조, 설비를 숙지해 화재발생시 원활한 진압활동을 도모하고, 안전부서 종사원을 격려해 소방관계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시설주의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제고로 자율소방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다중이용업소 현황

계	문화 집회	판매 시설	의료 시설	노유자	숙박 시설	공장	위험물	기타
313	8	17	28	26	97	86	10	41

전남도는 또 대형화재취약대상에서 화재발생시 예상되는 다양한 장애요인을 파악 효율적인 소방행정관리를 통해 화재예방 및 효과적인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취약대상에 대한 가상대응매뉴얼을 작성 관리하였다. 사고대응 매뉴얼은 대형화재취약대상 313개소를 작성하여 소방특별조사 등 사전 예방활동 자료로 관리하고 재난발생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상에 대하여도 점진적으로 확대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18.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전남 영광에는 1980년도 한빛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된 후 1986년 8월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총 6기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상시 발전소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 및 안전성 감시가 필요한 상황으로 도민 참여를 위해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기초소방시설 보급 현황

구분	기별	착공	준공	상업운전	발전용량	사업비
계	6기	-	-	-	590만kW/h	9조 4,750억원
기동중	1호기	'80. 3.	'86. 8.	'86. 8.	95만kW/h	2조 400억원
	2호기	'80. 3.	'87. 6.	'87. 6.	95만kW/h	
	3호기	'87. 5.	'95. 3.	'95. 3.	100만kW/h	3조 3,228억원
	4호기	'87. 5.	'95. 12.	'96. 1.	100만kW/h	
	5호기	'96. 9.	'02. 4.	'02. 4.	100만kW/h	4조 1,078억원
	6호기	'96. 9.	'02. 12.	'02. 12.	100만kW/h	

그러나 지난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사회 전반적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2012년 발생한 품질보증 서류와 시험성적 서류 위조 및 부품 납품 사업자 비리 등으로 도민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신이 매우 확대되었다.

이러한 원자력 안전에 전반적으로 우려가 증가한데는 고리 1호기 정전은폐 사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사건 조사과정에서 원전 관리자의 지시에 의해 사건이 은폐되고, 규제기관에게 보고도 한 달 이상 지연되는 심각한 안전문화 결여가 있었음을 밝혀졌다. 이후 사업자 뇌물수수, 품질검증서 위조사건 등 안전문화 전반에 걸쳐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년여에 걸쳐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국내 원전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국내외 동향을 고려하여 안전규제 절차를 개편하였으며, 사고 교훈을 반영한 원자력 안전성 강화 및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011년 이후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그동안의 안전성 강화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원자력 안전에 대해 도민에게 불신을 가져다 준 사건임과 동시에 국내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인 신인도와 신뢰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는 후 원자력안전규제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2011년 10월 26일에 단행된 행정체제 및 법체계의 변화가 있었다. 즉 원자력 안전규제 소관 행정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고 이전의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진흥법으로 나눈 변화가 그것이다.

기초 지자체는 원자력안전전담조직과 원자력 전문인력을 1~2명 충원하였으나, 광역지자체에서는 부산광역시가 자체적으로 2013년 1월에 원자력정책담당에서 원자력안전실 2개담당으로 확대하여 원전사고와 인접국가방사능 누출사고에 대한 원자력 정책과 안전을 담당한다.

전라남도는 안전총괄과 비상대책민방위담당에서 화재방요원이 원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전담조직 신설과 인력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원전 납품비리와 품질검증서 위조 등이 언론의 포화를 받았다. 한수원은 2003년~2012년간 원전부품 납품업체(대리점)가 제출한 해외검증기관의 검증서 60건이 위조 의혹이 제기(2012년 9월 21일)됨에 따라 위조가 의심되는 2건의 품질검증서 위조된 사실을 확인(2012년 10월 19일)하였다.

이에 따라 10년간 한수원에 납품된 안전등급 부품 중에서 일반규격품을 대체구매후에 제출되는 서류인 품질검증서를 추출해 내어 발급기관인 해외 품질검증기관을 통해 위조여부를 확인한 결과, 9개 업체가 납품과정에서 54건의 위조된 품질검증서를 제출하였다. 한수원에 납품된 건 중에서 위조된 품질검증서와 관련된 것은 총 364 품목 11,478개 부품이며 그중 178 품목 6,012개 부품이 원전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최근 10년간 한빛원전 5, 6호기에 국내에서 제작·납품된 안전등급 부품 2,417품목을 대상으로 시험성적서(총 1,600개) 위조여부를 전서 조사한 결과 그중 15개의 위조된 시험성적서가 18개 품목 768개 부품 납품시 첨부되었고 이중 44개 부품이 조사당시 한빛원전 5, 6호기에 설치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한빛원전 5, 6호기에 위조로 밝혀진 필수냉동기 임펠러와 1차기기 냉각수열교환기 해수차단밸브 가스켓의 부품교체 및 성능시험 현장을 입회하여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한빛원전 5, 6호기 시험성적서 위조 부품 구매 및 설치 현황

구분	10년간 구매한 안전등급 부품 전체		시험성적서 위조부품 구매		시험성적서 위조부품설치	
	품목수	부품수	품목수	부품수	품목수	부품수
한빛5호기	2,417	135,810	18	768	3	26
한빛6호기					3	18

또한 2012년 11월 5일 제기된 한빛원전 5·6호기 품질보증 위조부품 납품 사건과 한빛 3호기 원자로헤드 관통관 균열 발생으로 2012년 11월 15일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를 촉구하는 범 도민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범 도민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에 도민중심의 민·관 합동조사, 비상대피로 신설 등을 제안하여 2012년 12월 11일 정부와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합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에 나섰다.

대정부 건의사항

- ① 도민이 추천한 전문가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 운영
- ② 한빛원전 인근주민 이주대책 마련
- ③ 한빛원전 인근주민 대피도로 신설(홍농~법성간 4차선 도로)
- ④ 국가방사선안전과학원 설립

민·관합동대책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한빛원전 5·6호기 품질보증 위조부품 납품 사건 조사를 2012년 12월 13일 착수하여 2012년 12월 31일 마무리 하였으며, 한빛원전 3호기 원자로헤드 관통부 결함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제시한 보수방법을 2013년 4월 13일부터 같은 해 6월 7일까지 국제검증기관에 검증용역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소 안전운영에 대한 상시적인 협의를 위해 2014년 3월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와 도민간 원자력안전에 관한 소통체계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에도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비한 방사능방재대책 추진으로는 매 4년마다 중앙부처, 교육, 경찰, 군, 소방 등이 참여하는 방사능방재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범훈련, 도상훈련, 실제주민대피훈련 등이다.

또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방사능방재계획” 및 “원전안전분야(방사능 누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수립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19. 사회공헌사업 유치

사회공헌사업은 ‘제2의 사회안전망’ 이라고 불린다. 사회공헌사업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핵심역량을 사회에 투자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공헌사업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1사 1촌, 사회복지시설 지원, 봉사활동, 기부, 물품공여, 사업 지원 등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타 지역에 비해 저소득층이 많고 고령화가 심화되어 복지수요가 높은 전남에서는 2012년부터 정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 중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사업중에서 단순 봉사활동이나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을 제외하고, ‘사랑의 황금마차 지원’, ‘사랑의 에너지 나눔 사업’, ‘난방비 지원사업’, ‘밑반찬 및 장학금 지급’ 등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유치하여 사회안전망 기능을 보완하고 있다.

사회공헌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유대감 확대와 협력체계 구축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우정사업정보센터(나주 혁신도시 소재)와 사회공헌사업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13. 5. 23.)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제도화함으로써 사회공헌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2015년까지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1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회공헌사업과 모델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농어촌 일자리 창출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예를 들면 ‘슬로시티 관광투어’, ‘녹색나눔 숲, 녹색복지 공간

사업' 등은 전라남도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했고, '농산물저온 유통체계 구축', '전통주 제조업체 컨설팅지원', 'GAP 생산자단체 지원' 사업 등은 농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앞으로 전남도의 사회공헌사업은 참여기관 확대와 참여의 제도화에 주력해야 한다.

우선, 공공기관은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책무에 따라 사회공헌사업 추진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경기변동에 덜 민감하므로 사회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분야에 집중 투자하도록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은 경기변동에 따라 사회공헌사업 추진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윤추구라는 주 목표와 상충 될 수 있어 여건에 따라 추진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비자 구매력 확대를 위한 이미지 구성 방법인 광고만큼이나 사회공헌사업이 중요함을 인식시키고, 기업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사업을 제안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다수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을 이끌어 내고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에 힘써야 한다. 이러한 인센티브제도 중 하나인 '지역공헌사업 인증제도'는 기업에서 지역주민을 적극 고용, 지역생산물 우선 구매, 복지인프라 구축하는 등 지역에 기여하는 경영체를 주기적으로 인증하여 인증마크 부여 및 홍보, 각종 행사참여 우선권 부여, 용자 등 지원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공헌사업 인증제도가 활성화되면, 주민에게 지속적인 선순환 효과를 줄 수 있는 복지·문화 인프라 구축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나아가 참여형 사회공헌사업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참여형 사회공헌 사업은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핵심역량을 교육이나 컨설팅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전달함으로써 창업 등 일자리 창출에 활용할 수 있다. 공공 기관이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단순 기부, 봉사활동 등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면 주민의 인지도가 낮아져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기관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사회공헌활동은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으므로, 기업과 주민이 함께 하는 '참여형 사회공헌사업' 도입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유 및 체험 프로그램을 뛰어난 자연·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도내 마을들과 협약을 맺어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20. 취약계층아동 지원 새싹꿈터 운영

전남도는 2013년 7월 경제적인 부담으로 캠프활동 참가가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학습을 통해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문화체험 공간인 “새싹꿈터”를 전남 장성군 황룡면에 유치해 개소하였다.

장성에 등지를 튼 “새싹꿈터”는 2012년 호남권(전남, 전북, 광주지역)에 지역아동센터 인프라와 연계가 가능하고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민간투자 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유치지역 선정을 위하여 3개 시도가 이용이 편리하고 폐교 무상사용이 가능한 지역(무안군, 나주시, 해남군, 장성군)을 상대로 사전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장성군이 기 매입한 폐교에 숙박동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 장성군에 유치를 제안한 결과, 장성군이 수용하면서 최종 사업추진단(드림투게더)의 현장답사와 사업설명회를 거쳐 전국 새싹꿈터 2호점으로 장성군이 확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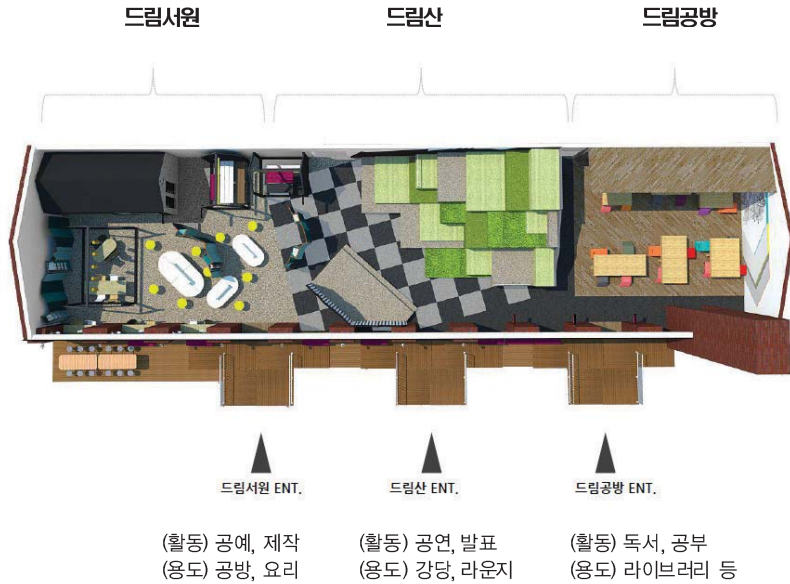


폐교 전경



폐교 실내

장성군 새싹꿈터는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장성군 황룡면 폐교인 (구)월평초등학교 황룡분교에 건물 리모델링, 조경공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우주·바다 등 친환경 개념의 숙소와, 활동학습이 이뤄지는 강당, 놀이공방, 자연 도서관 등 문화체험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새싹꿈터 배치도

이러한 장성 “새싹꿈터”는 그 동안 정부 주도로 지원되던 사회복지사업이 민간 기업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 단발적으로 후원하는 형태를 지양하고 효율적인 사회공헌 모델을 개발한 대표적인 사례다.

예컨대, 보통 기업들은 사회공헌을 독자적으로 진행, 자기 회사 홍보를 중요시한다. 하지만 새싹꿈터는 KT가 중심이 되어 매일유업, 대명그룹, 하나투어, 이스트소프트, 일성건설 등 21개 기업이 연계하여 (사)드림투게터를 설립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체험시설 설치·운영을 통하여 아이들이 가정형편 때문에 꿈을 접는 일이 없도록, 꿈을 키워나가도록하는 문화 체험공간이다.

더욱이 지역아동센터의 교육환경은 지역별·센터별 차이는 있지만 비교적 열악하다. 전남지역 395개 지역아동센터 대부분은 이용 근접성은 우수하지만, 대부분 좁고 열악한 주택가나 상가 내에 위치해 실내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만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통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 운영 공간 마련 및 프로그램 기획은 필수적이다.

지역아동센터가 환경적·물리적으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프로그램들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전용 프로그램 공간이 마련되고 아동에게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드림투게더는 새싹꿈터 운영을 통해 현재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꿈을 디자인 할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새싹꿈터 개소 이래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총 825명이 꿈 찾기, 요리경연대회, 역사·자연체험 등 다양한 캠프활동을 즐겼다.

한편 전남도는 장성군, 중앙일보, 드림투게더와 함께 새싹꿈터와 연계한 스마트스쿨 운영 협약을 통하여 휴마트 인성스쿨과 꿈지윈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고 있다.

휴마트 인성스쿨에는 지금까지 14회에 걸쳐 전국 489명의 청소년들이 2박 3일동안 예절교육을 비롯한 문화예술체험, 나눔교육, 지혜단련, 명사특강 등의 다양한 인성교육을 받았다.

휴마트 캠페인은 정부, 지자체, 기업, 기관이 참여하여 해방 이후 양적성장에 치중해온 한국사회의 작동원리는 스마트, 이제 더 이상 '스마트(smart)' 만으로는 우리사회의 질적 성숙을 기대할 수 없음을 주목하고 있다. 즉, 물질적 풍요라는 외형에 걸맞게 우리의 내면을 성숙시키는 것이 목표, 인간성(humanity)이 가미된 스마트(smart), '휴마트(Humart)' 사회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정신의 가치가 빈곤한 시대, 남을 먼저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즉 인간성이 살아 숨 쉬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국민운동이다.



새싹꿈터 개소식 전경



새싹꿈터 아동입소 전경

21. 도서지역 한방공중보건의 배치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질병유형의 변화, 의료수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같은 요인으로 인한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20세기 후반부터 질병중심의 관리체계에서 건강증진, 예방, 재활 등이 포함된 포괄적, 전인적인 관리체계로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한방의료서비스 역할 증대가 한층 더 요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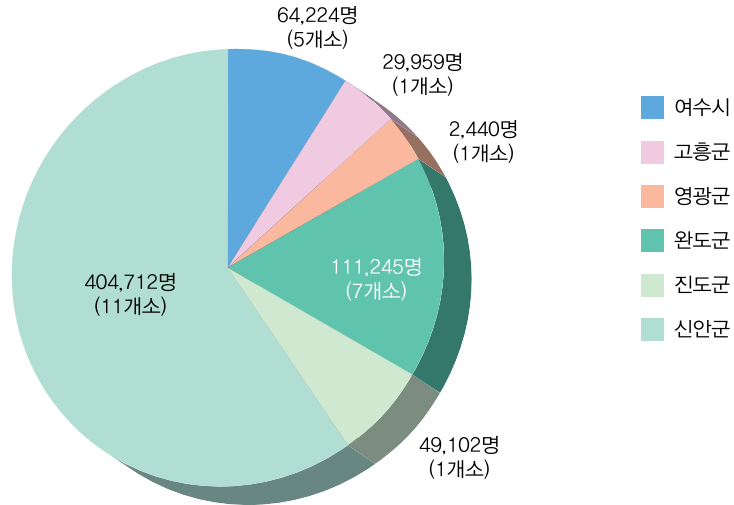
전남은 전국 486개 유인도서 중 60.8%인 296개 도서가 소재하고 있다. 이중 병·의원 등 의료시설이 없는 무의도서는 134개에 달할 뿐만 아니라 젊은 층의 대도시나 중소도시로의 이전으로 인해 대다수 나이가 많은 노인들만이 살고 있다. 이들은 주로 관절염 등 만성·퇴행성질환을 앓고 있어 이들 노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방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한방의료기관은 더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묵묵히 섬을 지키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의 위안을 줄 수 있는 것은 한방공공보건의료를 확대하는 것만이 대안이었다.

다행히 2000년 들어 정부가 인구고령화, 만성·퇴행성질환 증가 등으로 한방의료 선진화, 한의약 기술 개발 및 한의약 산업화 등 한의약육성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면서 한방공공보건의료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본 사업은 1998년부터 농어촌지역 보건소에 배치되기 시작한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하여 2001년부터 한방지역보건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남도는 의료취약지역 도서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우리 전남에서는 연륙되지 않은 의료취약 도서지역에 설치된 보건지소 26개소에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관절염 등 만성·퇴행성질환자 662천명에게 침, 뜸, 부항 등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특히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인원을 더 받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 배치인원의 17.6%가 우리 전남의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에 배치되어 최근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중풍, 치매, 관절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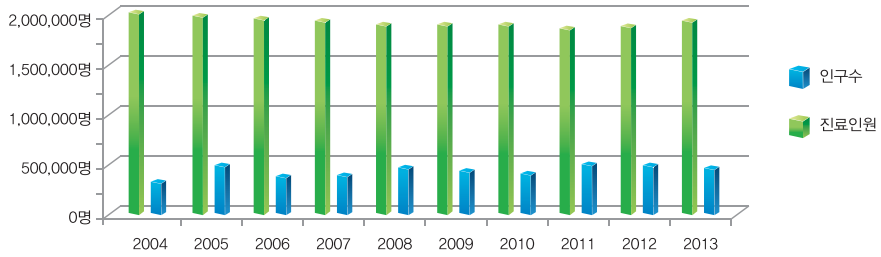
의료취약 도서 한의과 공중보건 의사
의료서비스 제공 실적(2004~2013년)

만성·퇴행성질환자 4,017천명(연인원)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침, 뜸, 부항 등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연도별 공중보건 의사 배치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4	계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계	전남	7,351	674	672	712	785	801	764	711	736	746	750
	전국	48,084	3,884	4,053	4,555	5,181	5,288	5,028	4,773	5,027	5,176	5,119
	전국대비율	15.3	17.3	16.6	15.6	15.2	15.1	15.2	14.9	14.6	14.4	14.7
의과	전남	4,304	394	394	428	474	474	444	414	428	420	434
	전국	29,994	2,414	2,530	2,909	3,367	3,392	3,186	2,911	3,086	3,064	3,135
	전국대비율	14.3	16.3	15.6	14.7	14.1	14.0	13.9	14.2	13.9	13.7	13.8
치과	전남	1,355	91	97	97	118	136	152	158	171	172	163
	전국	8,473	487	570	615	762	853	928	999	1,093	1,129	1,037
	전국대비율	16.0	18.7	17.0	15.8	15.5	15.9	16.4	15.8	15.6	15.2	15.7
한 의 과	전남	1,692	189	181	187	193	191	168	139	137	154	153
	전국	9,617	983	953	1,031	1,052	1,043	914	863	848	983	947
	전국대비율	17.6	19.2	19.0	18.1	18.3	18.3	18.4	16.1	16.2	15.7	16.2



공공보건기관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실적

한편 전남도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지소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병·의원이 없는 여수 등 11개시·군 184개 의료취약 무의도서(2012.12.31. 기준)에 병원선 2척(전남511호, 전남512호)을 운영하면서, 한의과 공중보건 의사 2명을 배치하여 도서주민에 대한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병원선의 한방진료는 환자를 보고, 듣고, 만져보는 진단의 과정을 거친 후 침과 약을 기본으로 수기치료, 뜸, 부항, 압봉, 테이핑 등의 요법을 부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병원선을 찾는 환자의 구성은 무릎 관절염, 손가락 관절염, 요통, 견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분들이 대다수이며, 이외에도 많은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이 오므로 소화기계의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 불면, 두통, 감기 등의 다양한 질환군의 환자들이 있다.

의료시설이 없는 곳을 돌아다니는 병원선의 특성상 한방진료는 병원선 진료의 꽃이라 할 수 있으며, 병원선은 2~3개월에 한 군데 도서를 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침과 뜸 치료를 통하여 단번에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병원선에 배치된 한의과 공중보건 의사들이 보람을 느낀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환자들과 접촉이 되는 치료를 한다는 점이 병원선 한방진료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병원선에서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여수 등 11개시·군 184개 의료취약 도서를 순회하면서 도서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19천명을 대상으로 264천명(연인원)에게 만성관절염 등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전남511호



전남512호

22. 풍수해보험 가입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전국 어디서나 주택, 온실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현재 풍수해보험은 전체 보험료의 55~86%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주민은 14~45%만 부담해 적은 비용으로 풍수해 피해발생시 실질적 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풍부해보험은 자연재해의 양상이 점차 다양화·대형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한반도를 찾아오는 태풍의 위력은 예전에 비해 보다 강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구의 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자연재해의 양상이 점차 다양화·대형화되는 추세로 볼 수 있다.

예컨대, 해마다 19~23개 정도의 태풍이 발생하고 이중 2~3개는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2013년에는 다행히 태풍피해가 없었지만 2012년에는 제7호 태풍 카눈, 제14호 태풍 덴빈, 제15호 볼라벤, 제16호 산바가 연이어 휩쓸고 지나가 전남도내 재산피해액만 4,110억원에 달했고 이를 복구하는데 무려 6,820억원이 투입되었다.

특히 2002년 태풍 '루사'는 5조1천479억원을 기록했고, 2003년 태풍 '매미'는 4조 2천225억원, 2007년 태풍 '나리'는 1천572억원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과거에 비해 공공시설피해보다는 사유시설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도는 여름철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도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끝에 풍수해보험이 저렴한 보험료로 피해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강조하면서 도민들의 가입에 총력을 기울였다.

예컨대, 고향을 떠난 출향인사(자녀)를 대상으로 2007년 6 ~ 9월까지 1,535부의 서한문을 발송하여 풍수해보험을 효도상품으로 홍보하였으며, TV 자막광고, 라디오, 신문 등 3종 140회, 부단체장회의, 현수막, 전광판, 지역소식지, 반상회보 4종 317개소, 풍수해보험 가두 캠페인, 자체교육 등을 역점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남도는 2010년 전남지역을 강타한 태풍 “덴무” 내습시 화순군 A씨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8,8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2,97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조기에 생활 안정을 찾았으며, 반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주택은 900만원만 지급되었다. 또한 2012년 “덴빈”내습시 무안군 I씨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45,4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3,51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조기에 생활 안정을 찾았다.

무엇보다도 2012년 태풍 덴빈·볼라벤 피해시 일부 농민들이 풍수해보험에 799건을 가입하여 67억1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큰 걱정을 덜어 낼 수 있었다.

이처럼 풍수해보험은 전남의 농수산업에 큰 희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정책보험을 통해 얻어지는 위험관리기법과 풍수해보험 지도를 비롯한 각종 통계자료의 민관 공동 활용으로 민간보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이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를 책임질 수 있는 정책보험으로서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재난에 대비하게 하는 효과는 물론 “우리의 터전 고향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전남도의 풍수해보험사업은 홍보효과로 많은 주민들이 풍수해보험의 이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년 가입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2013년 전남은 주택 53,609건, 비닐하우스 1,249건을 가입하여 2010년부터 4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였다.

다만, 앞으로 낮은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서는 ‘임의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풍수해보험문화 정착을 위해서 민영보험사와 자치단체간 연계를 통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울러 최대한 많은 도민들이 자연재해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상공인

시설인 상가·공장 등도 보험가입대상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23. 의류모집운동 대대적 전개

전남도는 2011년 3월 7일 박준영 지사의 지시로 안입는 옷, 신발 등 나눔 캠페인 실천을 위하여 지구와 이웃을 살리는 녹색생활실천「아름다운 나눔장터」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나눔문화운동」은 2011년 5월 12일 “가정의 달” 행사에서 전라남도 여성단체협의회와 아름다운가게 공동으로 오랫동안 장롱 안에 잠자는 안입는 옷, 신발, 잡화 등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고, 알뜰 구매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나눔장터」운동을 4월 25일 부터 5월 31일까지 전남도청 직원, 도 여성단체 회원, 도내 대형마트 재고상품 등 전 도민의 기증을 실시하였다.

「나눔문화운동」은 2011년 5월 12일 “가정의 달” 행사시에는, 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와 아름다운가게 공동으로 오랫동안 장롱 안에 잠자는 안입는 옷, 신발, 잡화 등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고, 알뜰 구매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나눔장터」운동을 4월 25일 부터 5월 31일까지 전남도청 직원, 도 여성단체 회원, 도내 대형마트 재고상품 등 전 도민의 기증을 실시하였다

예컨대 나눔 장터사업은 의류 등 9,130점 수거 후, 나눠 쓸 수 있는 물품을 선별 5,667점(도 직원 5,460, 도 여협 2,517, 생활공감모니터단 878, 대형마트 275)을 확보하였으며 3,865점을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도민들이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아름다운가게 본부에서 물품 판매수익금 전액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여 병원 등 공익프로그램 지원과 주거환경개선 및 소년소녀가장학비 등을 지원하는데 기여하였다.

무엇보다도 나눔장터에서는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하고 녹색생활실천운동 일환으로 추진하였고, 가족놀이체험관 운영과 청소년 동아리 공연들이 펼쳐져 나눔장터를 찾은 이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하는 이벤트 문화도 함께 펼쳤다.



사랑의 의류 전달

사랑의 의류 수거작업

이에 따라「아름다운 나눔장터」운영은 전 도민에게 더불어 함께 사는 이웃사랑 나눔실천 인식 개선과 대대적인 동참으로 나눔문화 확산 전개 운동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실현과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끌어내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2012년에는 전남도내 폭력피해 여성 및 동반아동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도청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류수집 운동을 전개한 결과, 3천 1백 31점을 수집하였다. 이들 수집된 의류는 분류작업 등을 통해 12월 17일 도내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8개소에 전달되었다.

의류수집 운동은 2012년 12월 11일 실국장 토론회에서 박준영 지사의 특별지시로 진행되었으며, 대부분 폭력피해 여성 및 동반 아동들이 긴급

피난처나 쉼터 등 보호시설에 입소 시, 겨우 몸만 빠져 나온 경우가 많아 의류가 부족한 현실에서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가을·겨울의류(여성복, 아동복)를 수집하였다.

박준영 지사는 이와 관련, “동절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폭력피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성과 동반아동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의류 수집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몸소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 전남도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가정폭력 등으로 부터 고통 받는 여성이 발생 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전남도는 2013년 5월 22일 도청 공무원들과 도민이 함께 모은 ‘사랑의 의류’ 3,800점을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청소년 쉼터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 19개소에 전달하고 매년 끊이지 않는 나눔 문화 확산과 이웃사랑 실천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도는 앞으로 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소외되고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데 동참하고 일상 생활속에서 이웃 사랑을 실현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구현에 앞장 설 것이다. 이를 통해 따뜻한 도민의 훈훈한 정이 모여져서 우리지역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선도자로서 나눔문화 활동을 지속시켜 나갈 것이다.